귀촌과 지역공동체 육성 정책의 연계 추진방안

성 주 인 연구위원 김정섭 연구위원 마상진 연구위원 윤병석 초청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성 주 인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3장, 제5장 집필 김 정 섭 연구위원 제5장 집필 마 상 진 연구위원 제2장 집필 윤 병 석 초청연구원 제4장, 부록 집필

머 리 말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대화 이후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경험했던 농어촌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농업 종사 외에도 은퇴 후 여가 생활이나 요양, 또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농어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정책은 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앞으로는 농업과 더불어 농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소홀했던 귀촌 및 지역공동체 정책의 연계 협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지역사회를 위한 귀농·귀촌인의 역할을 살펴보고,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과 지역공동체 육성 정책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 로 전국 주요 권역별로 네 차례에 걸쳐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정책들을 논의하고 귀감이 될 귀농·귀촌인의 지역공동체 활동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 가들과 현장의 많은 귀농·귀촌인들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현장에서 많은 수 고를 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귀농·귀촌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2.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요 약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점차 많은 도시민들이 농어촌으로 이주하고 있다. 지금껏 인구 유출을 겪어 온 농어촌에서 도시 인구 유입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젊고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이 지역에 이주하여 농어촌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높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기존 마을과 격리된 신규 단지 조성 방식의 인구 유치 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준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귀농·귀촌 붐을 타고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에 실패하고 도시로 회귀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제는 도시 인구의 농어촌 유입에 초점을 두는 정책 개발 초기 단계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귀농·귀촌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농어촌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을 제시해 온 사례들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인의 역할을 살펴보고,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지역공동체 육성 정책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시·군 지자체 수준의 문헌 분석, 주요 설문조사 결과 분석, 관련 통계 데이터 집계, 정책 세미나 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지역 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로 네 차례에 걸쳐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제 발표와 함께 타 지역에 귀감이 될 귀농·귀촌인과 지역공동체 활동사례들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농어촌 마을의 인구 고령화와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귀 농·귀촌의 증가는 농어촌 지역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유입 인구가 침체된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일이 많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기대가 존재한다. 그러나 반대로 고려해야 할 쟁점들도 많이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귀촌 정책 대상이 불분명하다. 특히 귀촌의 경우 단순히 농어촌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행위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둘째, 귀농·귀촌이 농어촌의 인구 유치 수단으로 부각되어,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셋째, 귀농·귀촌인의 지역 활성화역할에 대한 지역적 기대와 관심이 크다.

농어촌에서 귀농·귀촌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도농교류 사업이나 각종 경제 활동의 경우 귀농·귀촌인들이 분포하는 곳일수록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기존 주민들이 담당하는 데 제약이 있는 활동에서 귀농·귀촌인이 기여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농·귀촌인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먼저 이주해 온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새로 이주하는 도시 민들의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하여 귀농·귀촌 시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 고 있었다. 이러한 단체의 활동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자체의 파트너로서 수행 하는 역할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지역 내 갈등을 불러오고 특정한 이해 관계 속에서 기존 주민들과 경합하는 일을 진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

이상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귀농·귀촌인들의 활동과 농어촌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 사례를 살펴보았다. 귀농·귀촌인 개인 차원에서 도농교류나 지역의 문화·복지·교육 등에 관련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그리고 소득 증대를 위해 기여한 사례들을 제시하였으며, 개인 수준이 아니라 지자체와의 민관 협력 파트너로서 귀농·귀촌 단체가 활동한 사례와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나서서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조장하는 일은 삼가고, 정부 정책의 초점은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도시민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두어야 한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나아가 다양한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귀농·귀촌인들을 포함한 민간단체의 활동이 효과적이므로, 행정과수평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민간 기구 역할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지자체의 귀농·귀촌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조직 모델 확산을 유도한다. 둘째, 귀농·귀촌 관련 기구의 활동을 기존 주민 조직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귀농·귀촌 분야의 민간단체가 사 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그 밖에 지역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주민이나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하는 귀농·귀촌 교육 실시, 재능 기부자나 예비 귀농·귀촌인, 도시민과의 지속적인 교류 기회 모색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 Study of a Plan to Link the Local Community Development Policy with Urban-to-Rural Migration

Background of Research

With the growing public's interest in a returning to rural areas, a growing numbers of urban residents are moving to rural areas. Moreover, expectations are high that the inflow of relatively young, highly educated people in the high-income category could play a big role in revitalizing the rural areas.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early stage of policy development where the focus was placed on inflow of urban population into rural areas and seek a new direction of urban-to-rural migration so that it is mutually beneficial to the local community and the migrants alike. With such a background in mind,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the migrants and seeks to find a plan that can link the migration support policy with the local community development policy.

Method of Research

To this end, this study employed literature review, collection of statistics, analysis of survey results, and holding of policy seminars. In the case of the policy seminars, which were held jointly with the Presidential Committees on Regional Development, they were held to discuss in each one of the four major regions of the country.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increase in the urban-to-rural migration is a very encouraging sign from the perspective of rural development. Moreover, there is a high expectation for policy support in that the new inflow of population can contribute much to revitalizing the stagnant rural economy.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are many conflicting issues to consider. First, it is unclear as to who are the policy targets of rural migra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those migrants who have not chosen farming as their occupation, it is unclear as to how they can be distinguished from those who have simply relocated their residence. In other words, the differentiation of those returning to a farm from those simply re-

locating to a rural village varies from one administrative region to another. Second, since rural migration has been highlighted as a means of attracting population into rural areas, policies have focused less on settling in of the migrants. Third, the local communities' expectations and interest in the migrants' role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re high.

This study examined what roles the migrants are playing in rural areas. In the case of urban-rural exchange projects or economic activities of various kinds, the activities tended to be livelier where there was a higher number of migrants. From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too, there were contributions made by the migrants as they were able to increase the synergy effect of the rural migration policy by sharing their experience of migration and playing the role of helping new migrants to settle in a rural area. As the migrants' experience of providing assistance accumulated, their role as a partner to the local government expanded too.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for seeking solutions that can harmonize the migrants' activities with the local community, this study examined cases of the migrants' local community activities and presented implications to seek solutions that can harmonize the migrants' activities with the local community.

Based on the summary of the above discussion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The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taking a leadership role in accelerating the urban-to-rural migration and focus on minimizing the mistakes that can be made by those who are preparing to move to a rural area. Since private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migrants are effective in helping the settling-in of migrants and inducing their participation in diverse activities, the policy focus should also be placed on revitalizing the role of private organizations so that they can cooperate with the administration on a horizontal footing. A number of policy measures can be devised to achieve this. First, efforts should be made to induce the distribution of an organizational model of private-public cooperation that can carry out the local government's rural migration policy. Second, policy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link the activities of rural migration organizations with the organizations of native residents. Third, the socio-economic fields of private organizations working for urban-to-rural migration should continuously be expanded.

Researchers: Joo-In Seong, Jeong-Seop Kim, Sang-Jin Ma and Byeong-Seok Yoon

Research period: 2012. 4. - 2012. 10.

E-mail address: jiseong@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보고서 구성
제2장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적 의의
1.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동향 ···································
제3장 농어촌에서 귀농·귀촌인의 역할
1.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 현황
제4장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 사례
1. 개인 및 마을 단위 활동
제5장 정책 방향과 과제
1. 정책 방향
2. 귀촌과 지역공동체 정책의 연계 방안6

Н	早
т	\neg

미나 결과(전북권)69	세미나	연계	정책	촌-지역공동체	·록 1:	부
]나 결과(경상권)85	세미나	연계	정책	· 촌-지역공동체	록 2:	부
]나 결과(충청권) 102	세미나	연계	정책	· 촌-지역공동체	-록 3:	부
]나 결과(경기·강원권) ······· 127	세미나	연계	정책	· 촌-지역공동체	-록 4:	부
140					므칭	치고
149					군인	台上

표 차 례

제2장	
丑 2-1.	동과 읍·면 사이의 인구 이동8
丑 2-2.	향촌 이동 인구의 연령 분포9
丑 2-3.	농어촌 마을의 규모별 구성 비율 변화13
班 2-4.	마을의 고령 독거 가구 비율14
班 2-5.	도시민이 희망하는 농어촌 이주 후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 … 16
丑 2-6.	귀농·귀촌 정착 실패 이유 ······19
표 2-7.	지역사회에 필요한 귀농·귀촌인 역할21
제3장	
丑 3-1.	마을 모임과 활동의 참여도가 높은 주민 비율24
班 3-2.	마을의 도농교류활동 현황과 귀농·귀촌 가구 분포 ·······25
丑 3-3.	마을의 귀농·귀촌 가구 분포 현황과 경제활동 조직 구성 25
丑 3-4.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 현황(이주 시기별 비교) 26
丑 3-5.	지자체의 귀농·귀촌 시책에 대한 시·군 담당자 평가 30
丑 3-6.	귀농·귀촌이 농어촌 발전에 미치는 영향 ······31
丑 3-7.	귀농·귀촌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사회의 부정적 영향32
제4장	
표 4-1.	두레농장 운영 현황48
제5장	
丑 5-1.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적응에 역할을 하는 조직66
표 5-2.	부처별로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 현황67

그림차례

세2상	
그림 2-1.	읍·면별 향촌 인구 분포(2010년) ·····9
그림 2-2.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 변화 추이 10
그림 2-3.	고령화된 읍·면 지역의 연도별 분포 현황12
그림 2-4.	읍·면별 과소화 마을의 변화 추이 ······13
그림 2-5.	향촌 인구이동의 개념17
그림 2-6.	연도별 귀농 및 귀촌 가구 구성18
제3장	
그림 3-1.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 관련 민간단체 설립 현황28
그림 3-2.	귀농·귀촌 분야 민간단체에서 수행 중인 활동 내용 29
제4장	
그림 4-1.	상주시 승곡마을의 꾸러미사업과 도농교류 활동37
그림 4-2.	안남면 어머니학교41
그림 4-3.	배바우 도서관과 커뮤니티 버스43
그림 4-4.	행복한 노인학교 개교 및 운영44
그림 4-5.	학선리 마을박물관45
그림 4-6.	인덕두레농장과 구암두레농장48
그림 4-7.	서천군 귀농인협의회 주요 활동53
그림 4-8.	진안군의 민관 협력에 기반한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체계 … 57
제5장	
그림 5-1.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관련 지원 사업 67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 유지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시책을 펴고 있으며, 정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 이러한 최근의 노력에 힘입어 귀농인 유치 실적이 좋은 일부 지자체에서 는 최근 농가인구 및 주민등록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 오랜 기간 인구 유출을 겪어온 농어촌에게 있어 도시 인구 유입은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젊고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이 지역에 유입됨에 따라 이들이 농어촌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높다.
-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귀농·귀촌의 파급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나타나 는 것은 아니다.

- 예컨대 기존 마을과 유리된 신규 단지 조성 방식의 인구 유치 사업이 갖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1) 공폐가가 방치된 기존 마을은 과소화되는데 다 른 곳에서는 도시민의 신규 주택 입지가 늘어나면서 난개발과 경관 훼손 이 일어나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 준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귀농·귀촌 봄을 타고 농어촌에 이주하여 지역 사회 정착에 실패하고 도시로 회귀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이는 귀농·귀촌 에 실패한 당사자에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 최근 들어 귀농·귀촌이 각광을 받으면서 외형적으로는 도시민 유치 실적을 올리는 성과는 보이고 있으나, 위와 같은 부정적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 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 도시 인구의 농어촌 유입에 초점을 두는 정책 개발 초기 단계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귀농·귀촌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현재 대두되는 과제이다.
- 그동안 농어촌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지역 사회 기여 가능성을 제시해 온 사례들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작업이 요구되 는 시점이다.
 - 마을의 도농교류 사업이나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귀농·귀촌인들이 기여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 또한 최근에는 농어촌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조직하여 활로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귀농·귀촌인들이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인의 역할을 살펴

¹⁾ 이에 대해서는 성주인 등(2011) 및 성주인·김성아(2012)에서 논의한 바 있다.

보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지역공동체 육성 정책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특히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인이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그 시사점을 찾아내는 데도 초점을 둔다.
- 이러한 사례 발굴 및 확산 작업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전국 주요 권역 단위 순회 세미나를 연구와 병행하여 개최하는 데에도 연구의 의의를 둘 것이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2.1. 연구 범위

-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귀농과 귀촌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귀농: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이며 본격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귀촌: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되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 거나 전원생활 자체를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단순히 직장 이전이나 가족과의 거주 등을 이유로 옮긴 '일반 이주'의 경우는 귀촌에서 제외한다.2)
 -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이라는 용어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사용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양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 다만, 각종 분석 작업이나 사례 고찰 등 내용 전개 과정에서는 영농 목적

²⁾ 귀농·귀촌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는 제2장에서 다시 상세히 진행할 것이다.

으로 농어촌에 내려간 귀농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참여에 초점을 두어 귀촌을 위주로 논의를 할 것이다.

- 제목에 포함된 '지역공동체'라는 용어는 다음의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 원래 공동체란 구성원들을 결속하는 규범이나 행동양식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지역공동체'는 그러한 엄밀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 구성원들 간에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영역으로서 '커뮤니티'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보다 정확히 '지역공동체 정책'이라 지칭할 때는 최근 대두되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 경제' 분야 조직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회사 등이나 그와 유사한 조직 형태)를 육성하는 정부 정책을 의미한다.3)
- 이 연구는 주로 시·군 지자체 범위의 논의에 초점을 둔다.
 - 각종 분석 작업이 대체로 시·군 이하 단위에서 이루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권역별 정책 세미나를 통한 사례 발굴 시에도 기초적인 커뮤니티 수준의 자료들이 주로 제시되었다.

2.2. 연구 방법

- 문헌 분석
 - 귀농·귀촌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의 쟁점 등을 명확히 하는데 참고로 삼았다.

³⁾ 공동체 개념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후반부에 정책 과 제를 논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현황 및 사례 고찰 단계에서는 가급적 '지역 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지자체의 귀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 농어촌 주민, 귀농·귀촌인,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 필요시에는 원자료를 입수하여 재집계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조사 자료의 출처는 본문에 각각 명시하였다.

○ 관련 통계 데이터 집계

- 전국 단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이동 추이 등을 분석하였다. 농림 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가구 집계, 통계청 자료(원시 자료 포함) 등을 이 용하였다.

○ 정책 세미나 개최

-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로 '귀촌과 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하는 정책 세미나를 네 차례 개최하였다.4)
- 세미나에는 권역별로 시·군의 귀농·귀촌 및 지역공동체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였다. 주제 발표와 함께 타 지역에 귀감이 될 귀농·귀촌인과 지역공 동체 활동 사례들을 청취하는 순서를 가졌으며, 각각의 발표 내용을 제4장의 사례 정리 시 참고 자료로 삼았다.

3. 보고서 구성

- 이 보고서는 5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별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장에서는 먼저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동향을 인구이동 데이터, 귀농·귀

⁴⁾ 각 세미나 개요와 토론 요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촌 통계 등에 입각하여 살펴본다. 이어 귀농·귀촌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배경을 농어촌 지역의 입장에서 짚어볼 것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귀농·귀촌의 정책적 쟁점을 논의하고 이후 고찰할 연구 과제들을 제시한다.

- 제3장은 농어촌에서 귀농·귀촌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내용이다. 주로 설문조사 결과들을 분석하면서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인이 개인적인 차원과 조직적인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제4장은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귀농·귀촌 인이 도농교류나 지역의 문화, 복지, 교육 등 서비스 개선, 그리고 소득 증대 에 실제 기여한 사례들을 다양하게 고찰한다. 또한 개별적 수준이 아니라 지자체와의 민관 협력 파트너로서 귀농·귀촌 단체가 활동한 사례와 시사점 도 제시한다.
-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귀촌과 지역공 동체 정책의 연계 추진을 위한 과제를 제안한다.

제 2 장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적 의의

1.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동향

1.1. 향촌 인구이동 추세

- 2000년대 들어서 그동안 지속되었던 '이촌향도'의 인구 이동이 약화되고 농 어촌으로의 인구 이동이 우세해지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다.5)
 - 2010년에 도시(동)에서 농어촌(읍·면)으로 거주지를 옮긴 '향촌형 인구 이동' 총량은 약 93만 명이었던 반면에, '향도형 인구 이동' 총량은 약 83만 명이었다(표 2-1).
 - 농어촌에서 도시로 유출되는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도시에서 농 어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⁵⁾ 김정섭 등. 2012.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KREI 농정포커스」제13호.

표 2-1. 동과 읍·면 사이의 인구 이동

단위: 명

구 분	동→읍 (A)	동→면 (B)	동→읍· 면 (A+B)	읍→동 (C)	면→동 (D)	읍· 면→동 (C+D)	(A+B) /(C+D)
900111	433,014	547,565	980,579	375,899	555,829	931,728	1.05
2001년	(4.7%)	(5.9%)	(10.6%)	(4.0%)	(6.0%)	(10.0%)	1.05
 2005년	441,606	482,584	924,190	422,535	501,766	924,301	1.00
2000 t	(3.7%)	(4.0%)	(7.7%)	(3.5%)	(4.2%)	(7.7%)	1.00
2010년	451,297	474,828	926,125	378,937	450,877	829,814	1.12
	(4.0%)	(4.2%)	(8.3%)	(3.4%)	(4.0%)	(7.4%)	1.14

주: 괄호 안의 백분율은 당해 연도 전국 인구 이동 총량 가운데 해당되는 유형의 인구 이동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각 연도; 김정섭 등(2012) 재인용.

- 향촌 인구이동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농어촌 이주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 <표 2-2>의 향촌 이동 인구의 연령대별 구성 비율을 보면, 2005년과 2010 년 모두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40대 이상 연령 층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10년 구성 비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퇴연령층의 농어촌 정주 수요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도시 인구가 지향하는 목적지는 수도권과 대구 및 부산 등 광역시 인근 농 어촌이다.6)
 -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향촌 인구이동량이 큰 읍·면들은 주로 대도시권에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⁰ 대도시권을 제외하고는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농어촌 지역으로 향촌 인구 이동이 많은 편이다(김정섭 등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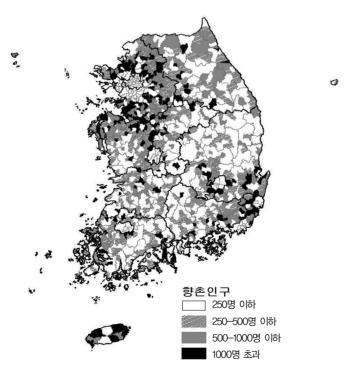
표 2-2. 향촌 이동 인구의 연령 분포

단위: %

연령대	2005년	2010년
0~9세	13.5	10.9
10~19세	9.7	10.6
20~29세	22.6	19.1
30~39세	21.9	21.4
40~49세	14.4	15.9
50~59세	8.1	11.2
60세 이상	9.7	10.8
합 계	100.0	100.0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각 연도; 김정섭 등(2012) 재구성.

그림 2-1. 읍·면별 향촌 인구 분포(2010년)



자료: 김정섭 등(2012)

1.2. 귀농·귀촌 가구 변화 추이

- 향촌 인구이동량뿐 아니라 영농 및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농어촌에 이주하는 도시민도 늘고 있다. <그림 2-2>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집계하는 귀농·귀촌 가구 수는 2001년 880호, 2006년 1,754호, 2011년 10,503호를 기록하는 등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7)
 - 2012년에도 상반기에만 귀농 귀촌 가구 수가 8,706호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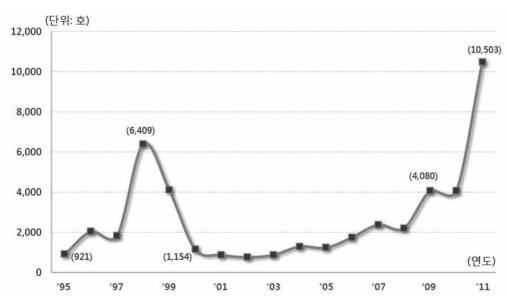


그림 2-2.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 변화 추이

자료: 김정섭 등(2012)

⁷⁾ 참고로 통계청에서 2011년 기준으로 집계한 귀농 가구는 10,075호로서 농림수산 식품부의 2011년 귀농·귀촌 가구 수와 비슷한 규모이다. 다만, 통계청 자료는 귀촌 가구는 제외하고 귀농 가구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이다.

2. 귀농 귀촌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대의 배경

2.1. 농어촌의 과소화·공동화와 정주 기반 약화

- 농어촌(읍·면) 인구는 2010년 875만 8,000명으로 전국 인구 대비 18.0% 이다.
 - 2005년 876만 4,000명과 비교해서 절대량 및 전국 인구 대비 비율(18.5%) 이 다소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농어촌의 인구 감소세는 둔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8)
 - 농어촌의 인구 감소세 완화는 귀농·귀촌 가구가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향촌형 인구이동량이 향도형 인구이동보다 우세해지는 등의 변화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성주인, 채종현 2012).
- 농어촌 인구 감소 추세는 거의 멈춘 듯하지만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농어촌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7% 였던 것이 2010년에는 20.6%가 되었다(김정섭 등 2012).
 - 2000년 기준 전국 읍·면 가운데 54.5%의 읍·면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었다. 그런데 2010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읍·면이 1,150개로 전체의 81.7%를 차지하였다.
 -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은 <그림 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⁸⁾ 특히 2010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삼아 2005년 이전 데이터 중 최근 동으로 승격한 곳을 제외한 후 읍·면 인구를 재집계할 경우 농어촌 인구의 감소세는 더욱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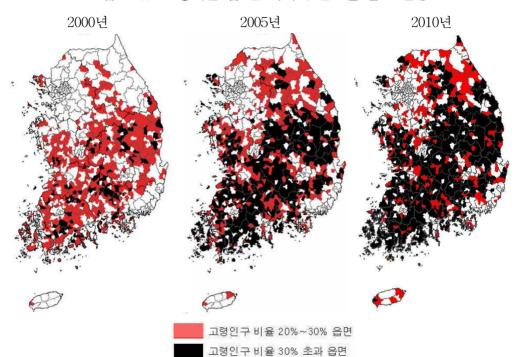


그림 2-3. 고령화된 읍·면 지역의 연도별 분포 현황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마을 단위(행정리 기준)로 살펴보면 농어촌의 인구 과소화·공동화가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표 2-3).
 - 2010년 기준으로 거주 가구 20호 미만의 과소화 마을 수는 총 3,091개로 전체 농어촌 마을(3만 6,496개)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 과소화 마을은 2005년에 2,048개(5.7%)로 집계되었는데 5년간 1,000개 이 상이 증가한 것이다.
- 과소화 마을이 주로 분포하는 읍·면을 보면 대도시 주변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 전반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그림 2-4).
 - 2005년에는 과소화 마을이 한 개 이상 분포하는 읍·면이 전체 읍·면 중 약 47%인 661개였는데, 2010년에는 전체의 63%인 884개 읍·면에 과소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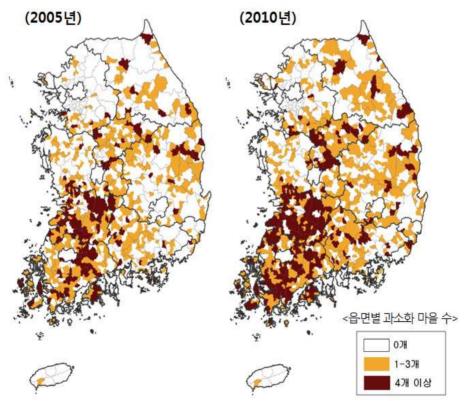
표 2-3. 농어촌 마을의 규모별 구성 비율 변화

단위: 개 %

					,	<u> </u>
구 분	20호 미만	20~59호	60~99호	100~ 149호	150호 이상	합 계
2005년	2,048	17,780	8,174	3,253	4,786	36,041
2003 12	(5.7)	(49.3)	(22.7)	(9.0)	(13.3)	(100.0)
201013	3,091	19,281	7,291	2,525	4,308	36,496
2010년	(8.5)	(52.8)	(20.0)	(6.9)	(11.8)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성주인·채종현(2012) 재인용.

그림 2-4. 읍·면별 과소화 마을의 변화 추이



자료: 성주인·채종현(2012)

- 과소화 마을일수록 고령 독거 가구 비율도 높아 마을의 존속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2년에 경기, 충북, 전북, 경북의 4개 시·군(12 개 읍·면) 행정리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9 20호 미만의 가구가 거주하는 마을 가운데 고령 독거 가구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었다(표 2-4).

표 2-4. 마을의 고령 독거 가구 비율

단위: %

ā	구 분	5%	6~10%	11~20%	21~30%	30%	합계
		이하				초과	
마을	소재지 마을	30.3	23.7	27.6	10.5	7.9	100.0
유형	배후 마을	17.1	17.1	27.8	<u>19.4</u>	<u>18.5</u>	100.0
	20호 미만	_	6.3	18.8	25.0	50.0	100.0
마을	20~39호	1.4	11.6	31.9	<u>24.6</u>	<u>30.4</u>	100.0
가구 수	40~59호	22.6	14.5	33.9	19.4	9.7	100.0
ハナ ナ	60~99호	11.1	20.6	34.9	19	14.3	100.0
	100호 이상	44.3	30.4	16.5	6.3	2.5	100.0
7	던 체	20.5	18.8	27.7	17.1	15.8	100.0

주: 1) 양평, 진천, 부안, 청송 등 4개 군 지역 마을 이장 조사 결과 집계.

2) 타 집단에 비해 독거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경우 밑줄로 강조.

자료: 성주인 등(2012)

2.2.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

○ 농어촌이 과소화·고령화되어 정주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귀농·귀촌 인 구가 유입되는 현상은 그 자체로 농어촌 지역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뿐 아 니라 새로운 유입 인구가 침체된 농어촌의 활성화에 기여할 일이 많다는 점 에서 정책적인 기대가 존재한다.

⁹⁾ 성주인 등. 2012.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특히 귀농·귀촌인들은 젊고 학력 수준이 높아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신규 영농 인력으로서 기대를 받고 있다.
 - 농어촌은 일손 부족과 영농 후계인력 문제를 겪어왔다. 2010년 농업총조 사 결과에 의하면 기존 농업인(농가 경영주) 중 61.8%가 60대 이상이다.
 - 반면 귀농·귀촌인은 평균 연령이 49.5세이고 60대 이상 비율은 15.7%로 나타났다. 학력도 대졸 이상이 60.6%로 기존 주민에 비해 월등히 높다.10)
- 농업 이외 분야에서도 귀농·귀촌인들이 역할을 발휘할 여지가 많으리라 전 망되기도 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도시민 조사 결과(성주인 등 2012)에서 농어촌 이주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를 보면 그 가능성을 알 수 있다(표 2-5).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마을사업이나 지역사회의 각종 활동 참여 등을 구상하는 비율이 일반 도시민에 비해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이들은 귀농·귀촌 교육 참여, 각종 정보 수집, 주택 및 토지 물색 등이주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농어촌 이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응답자이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농어촌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려는 사람들이 상당수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¹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귀농·귀촌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농업인재개발원 이 주관하여 2011년도에 조사한 결과이다. 출처는 다음과 같다.

⁻ 마상진. 2012. "귀농·귀촌자의 영농 실태와 교육 요구 분석."「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럼 제2차 전문가 세미나 자료집」, pp.29-49.

표 2-5. 도시민이 희망하는 농어촌 이주 후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

단위: %

			인기· /0
		이주 의향에 따	른 응답자 구분
	구 분	이주 준비 도시민	일반 도시민
본격적인 역	경농 활동	11.7	13.9
자영업/개역	인사업	7.8	13.1
향토자원기	-공업/농촌관광	6.5	5.6
	마을사업/지역사회 봉사활동	<u>33.8</u>	17.4
경제활동	취미/여가생활	28.6	<u>35.5</u>
안함	휴식/요양	6.5	<u>10.1</u>
	친목회 동호회 활동	3.9	3.0
기타		1.3	1.9
	합 계	100.0	100.0

주: 1) 농어촌 이주 준비 도시민은 귀농·귀촌 교육 참여, 각종 정보 수집 등 귀농·귀촌 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년 도시민 조사 결과(성주인 등 2012).

3. 귀농·귀촌 정책의 쟁점과 연구 과제

3.1. 귀농·귀촌 정책의 주요 이슈

3.1.1. 귀농·귀촌 정책의 대상

○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적 기대가 높지만, 고려해야 할 쟁점들도 있다. 우선, 정책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출발점인데, 무엇보다 귀농·귀촌의 범위를 명확 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2) 7}대 광역도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 향촌형 인구이동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거지 이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보니 그 일부를 차지하는 귀농·귀촌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 <그림 2-5>의 개념도와 같이 인구이동 통계에 기초하여 집계한 향촌 이동 량 중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집계한 귀농(A)과 귀촌(B)이 일부분을 차지하며, 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이주(C)가 다수를 차지한다.11)
- 이처럼 넓은 범위의 향촌 인구이동 중 무엇이 귀농·귀촌에 해당하는지 엄 밀히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림 2-5. 향촌 인구이동의 개념

(A)귀농 (B)귀촌	(C)일반 이주	
		Ĭ
87	향촌인구이동 = A+B+C	

- 특히 귀농에 비해 귀촌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 어렵다.
 - 귀농의 경우 농업 종사 등의 분명한 목적으로 농어촌에 이주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분명하게 해당 여부를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귀촌 이동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 <그림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의 경우 전체 귀농·귀촌 가구 중 귀촌이 차지하는 비율이 11.1%였는데, 2011년에는 37.7%로 집계되는 등 귀촌 가구 수는 집계 연도별로 편차가 크다. 그만큼 귀촌의 개념을 엄밀히 정하기가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 사실 이러한 편차는 귀농·귀촌 통계 집계의 기초 단위인 시·군 수준에서 귀

¹¹⁾ 도시(동)에서 농어촌(읍·면)으로 주거를 옮긴 '향촌형 인구이동'의 총량은 2011년 기준으로 약 62만 6,372명이다(동일 시·군 내 이동인 경우는 제외). 반면, 농림수 산식품부에서 집계한 2011년 귀농·귀촌 인구 규모는 2만 3,415명을 기록하였다. 귀농·귀촌 인구에 비해 향촌 인구이동의 규모는 대략 27배 많았다.

촌 인구를 산정할 때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책의 대상이 지역별로 상이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지자체 정책이 아닌 중앙정부 정책으로서 '귀촌 정책'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귀촌, **452** (11.1%) 귀농, **452** (88.9%) 기농, **3,615** (88.9%)

그림 2-6. 연도별 귀농 및 귀촌 가구 구성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발표자료 재구성.

3.1.2 농어촌 인구 유치 수단으로서 귀농·귀촌

- 귀농·귀촌 정책은 일차적으로는 농어촌 인구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그래서 상당수 지자체가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상담 등에 주력한다. 때로는 정착 지원금, 이사 비용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 인구 유치에 주력하는 곳은 많은 반면, 농어촌 이주 후 귀농·귀촌인의 정착 과정에 정책적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 다.12)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 후 농어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재 이주하는 도시민들도 나타나고 있다.

- <표 2-6>은 지자체 담당자들이 응답한 귀농·귀촌 정착 실패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농업 소득원 확보 문제나 자금 부족, 일자리 확보 어려움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13)
 -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해서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걸림 돌이 되는 문제들이 농어촌에는 상당수 포진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2-6. 귀농·귀촌 정착 실패 이유

단위: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 계
정보 및 교육 부족	1.0	14.1	14.1	47.5	23.2	100.0
자금 부족	0.0	4.0	22.2	51.5	<u>22.2</u>	100.0
생활여건 불편	4.0	15.2	36.4	40.4	4.0	100.0
농업 소득원 확보 문제	2.0	8.2	17.3	48.0	<u>24.5</u>	100.0
일자리 확보 어려움	4.0	17.2	22.2	42.4	<u>14.1</u>	100.0
마을 주민과의 불화	2.0	8.1	46.5	35.4	8.1	100.0
정부 정책의 문제	7.1	<u>28.3</u>	47.5	10.1	7.1	100.0
지자체 지원 부족	<u>14.1</u>	<u>31.3</u>	38.4	13.1	3.0	100.0

주: 박문호 등(2012)의 지자체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 조사 자료 재집계.

○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귀농·귀촌 정책은 도시 인구의 농어촌 유치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이 농어촌 정착 과정에서 부딪히는 시행 착오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향후에는 후자에 초점을 두고 귀농·귀촌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¹²⁾ 이에 대해서는 성주인 등(2011)에서 다루고 있다.

¹³⁾ 농어촌 이주 후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이나 이전 거주 도시로 재이주한 도시민 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실패 이유를 조사한 성주인·김성아(2012)의 연구 결과에 서도 이와 유사하게 경제적인 이유를 답한 경우가 많았다.

3.1.3. 귀농·귀촌과 농어촌 지역 활성화

- 단순히 도시 인구 유치에 그치지 않고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 <표 2-7>의 지자체 공무원 조사 결과를 보면 그것과 관련된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 귀농·귀촌인들이 농어촌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는 지 시·군의 귀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답한 결과이다.14)
 - 집계 결과, 전문적인 농어업 인력이나 2·3차 산업 인력, 젊은 경영인 등의 역할로 귀농·귀촌인들이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응 답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문화예술이나 교육·의료·복지 등 농어촌의 기초 서비스 분야에서 도 시민들이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 경제활동 영역에서의 역할보다는 주민의 생활 서비스 관련 분야의 활동을 기대한다는 조사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는다.
 -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비농업 분야 소득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현실을 지자체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론적인 수준에서는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인의 전반적인역할에 대해 기대가 높지만, 귀농인 유입에 따라 경제활동 영역에서 기존주민과 이해 상충이 나타나리라는 우려도 농어촌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성주인, 박문호 2013).
 - 문화,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는 농어촌에서 취약한 영역이어서, 지역에 이주해 온 도시민들이 이 분야에서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는 시각이 많다. 기존 주민의 역량만으로 또는 공공

¹⁴⁾ 본 자료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조사 결과는 다음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박문호, 오내원, 임지은. 201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적 서비스 전달 체계만으로 이 분야에 대한 주민 수요에 대응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 이러한 조사 결과에 입각해 볼 때, 앞으로 일선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에서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기초 서비스 분야의 활동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리라 예상된다.

표 2-7. 지역사회에 필요한 귀농·귀촌인 역할

단위: %

구 분	필요함	보통	필요치 않음	합계
전문적 농어업경영을 꿈꾸는 젊은 농어업인력	10.9	14.9	74.3	100.0
농수산물 가공·판매 등 농업 관련 2·3차 산업 인력	14.9	21.8	<u>63.4</u>	100.0
농어업 이외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 경영인	13.9	25.7	<u>60.4</u>	100.0
문화예술 계통의 전문인	<u>33.7</u>	33.7	32.7	100.0
교육, 의료, 복지 계통의 전문인	<u>22.0</u>	33.0	45.0	100.0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리더십을 갖고 일할 지도자	15.8	26.7	57.4	100.0
퇴직 후 노후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	14.9	40.6	44.6	100.0

주: 박문호 등(2012)의 지자체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 조사 자료 재집계.

3.2. 연구 과제

- 이 연구는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귀촌 정책과 지역공동체 정책을 연계 추진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귀촌 정책의 경우 그 대상과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 따라서 편의상 귀농·귀촌 정책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되, 귀농·귀촌인의 영농 종사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중 심으로 분석하려 한다.

- 귀농·귀촌인들이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찰하는 것이 이후의 중심 주제이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정책과 귀농·귀촌 정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 먼저 귀농·귀촌인들의 지역사회 활동 현황과 그로 인한 농어촌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해 개괄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 가능하다.
 - 귀농·귀촌인 개인 수준에서 지역사회 활동
 - 지자체의 파트너이자 집합적 단위로서 귀농·귀촌인 중심의 민간단체 활동
- 보다 구체적인 사례 고찰이 필요하다. 사례 연구 역시 다음과 같이 두 측면 으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귀농·귀촌인의 활동 사례
 - 귀농·귀촌을 매개로 한 민관협력적 추진체계의 형성과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 기여 사례
- 이러한 흐름을 따라 논의를 진행한 후 귀촌과 지역공동체 정책의 연계를 위한 해법을 찾아볼 것이다.

제 3 장

농어촌에서 귀농·귀촌인의 역할

1. 귀농 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 현황

1.1. 마을 활동 참여

- 농어촌 마을의 주요 활동과 모임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현황을 집계한 결과 를 <표 3-1>에 제시하였는데, 주민 유형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 기존 주민이나 일반 이주자와 비교할 때 귀농·귀촌 이주로 분류되는 응답 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각종 행사나 공동작업, 정부 지원사업, 동호인 모임 등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마을에 계속 살아온 기존 주민보다 높게 나타났다.
- 인구의 고령화 및 공동화로 농어촌 마을의 상당수가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1. 마을 모임과 활동의 참여도가 높은 주민 비율

				E 11. 70
그. ㅂ		الة الح		
구 분	계속 거주	귀농·귀촌	일반 이주	· 전 체
마을 공동 애경사	37.6	39.1	21.4	34.5
마을 공동작업	26.6	<u>35.5</u>	17.4	25.3
마을 친목모임	21.1	22.7	12.9	19.6
정부 지원 마을사업	9.0	<u>15.5</u>	4.7	8.5
마을 총회 등 마을회의	32.2	<u>39.1</u>	17.4	29.6
동호인 모임	11.4	<u>20.9</u>	9.0	11.4

- 주: 1) 양평, 진천, 부안, 청송 등 4개 군지역 마을 이장 조사 결과 집계.
 - 2) 해당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집계하였으며, 타 집단보다 귀농·귀촌 이주 집단의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은 밑줄로 강조.

자료: 성주인 등(2012)

1.2. 도농교류 사업과 경제활동 조직 참여

- 지역사회에서 귀농·귀촌인들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도농교류 활동 참여 마을과 비참여 마을로 구분하여 귀농·귀촌 가구 분포 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표 3-2>에 제시하였다.15)
 - 두 가지 이상의 도농교류 활동16)을 수행 중인 마을의 경우 도농교류 비참 여 마을과 비교할 때 귀농·귀촌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귀농·귀촌 가구 수와 마을 단위 도농교류 사업 활성화 정도 사이에 일정한 상관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¹⁵⁾ 성주인 등(2012)에서 실시한 4개 시·군(양평, 진천, 부안, 청송) 이장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¹⁶⁾ 체험관광, 농산물 직거래, 직판장 운영, 음식·숙박 등의 활동들 가운데 마을 단위에서 수행 중인 사업 개수를 집계하였다.

표 3-2. 마을의 도농교류활동 현황과 귀농·귀촌 가구 분포

				E 11. 70
	도농교류활동	도농교류활	동 참여 마을	
마을 구분	비참여 마을	1개 활동 참여 마을	2개 이상 활동 참여 마을	전 체
귀농·귀촌 없음	32.0	17.6	0.0	26.4
1~2호	21.9	23.5	37.5	23.8
3~4호	12.4	11.8	16.7	12.8
5~9호	16.0	20.6	16.7	16.7
10호 이상	17.8	26.5	29.2	20.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성주인 등(2012)에서 실시한 양평, 진천, 부안, 청송 등 4개 군지역 마을 이장 조사 결과 원자료 재집계.

자료: 성주인 등(2012)

- 마을 단위 경제활동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구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서도 귀농·귀촌 가구가 분포하는 마을에서 조직의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귀농·귀촌 가구가 5호 이상 분포하는 마을 가운데 경제활동 조직이 1개 이상 분포하는 마을의 비율이 69%로 나타났다. 반면 귀농·귀촌 가구가 없는 마을에서는 경제활동 조직이 없다는 응답이 61.7%로 집계되었다.

표 3-3. 마을의 귀농·귀촌 가구 분포 현황과 경제활동 조직 구성

단위: %

	마을의	<u></u> 전 체		
마글 丁七	없음	1~4호	5호 이상] 선세
경제활동조직 없음	<u>61.7</u>	42.2	31.0	43.2
경제활동조직 1개 있음	26.7	49.4	48.8	43.2
경제활동조직 2개 이상 있음	11.7	8.4	<u>20.2</u>	13.7
<u>합</u>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양평, 진천, 부안, 청송 등 4개 군지역 마을 이장 조사 결과.

자료: 성주인 등(2012)

- 이상의 조사 결과로부터 도농교류나 각종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이루는 데 귀농·귀촌인들이 기여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하지만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실제 활동하기까지 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일례로 <표 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귀 농·귀촌인들은 농어촌에 이주한 후 일정 기간 적응기를 거친 후에 각종 모 임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서 알 수 있다.
 - 2006년 이전에 이주하여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응답자들일수록 주요 모임 참석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성주인 등 2011).
-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농어촌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농어촌에 이주해 온 도시민들이 지역사회에 원활 히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자체의 귀농·귀촌 시책도 이러한 부분에 먼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 현황(이주 시기별 비교)

활동 구분	농	농어촌 이주 시기			
包含 年	2006년 이전	2007~2009년	2010년 이후	전 체	
주민회의나 마을행사	42.1	50.6	40.0	45.9	
영농조합, 작목반 활동	<u>31.6</u>	18.2	10.0	17.1	
지역사회 자원봉사	<u>15.8</u>	11.7	8.0	11.0	
동호회, 여가문화 활동	15.8	11.7	16.0	13.7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	<u>42.1</u>	28.6	28.0	30.1	
지역 농민단체 활동	<u>21.1</u>	2.6	8.0	6.8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5.3	3.9	4.0	4.1	
시·군 각종 위원회 활동	<u>10.5</u>	5.2	2.0	4.8	
기타	5.3	6.5	10.0	7.5	
적극 참여하는 모임 없음	31.6	35.1	36.0	34.9	

- 주: 1) 성주인(2011)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로서 금산군, 고창군, 봉화군 등 3개 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 2) 복수 응답 문항으로서 전체 응답자 대비 해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을 집계.

자료: 성주인 등(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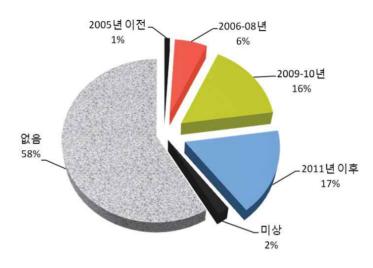
2. 민관협력 파트너로서 귀농·귀촌인의 역할

2.1. 지자체 귀농·귀촌 시책에서 민간기구 역할

- 지자체 수준의 귀농·귀촌 시책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중앙정부의 귀농·귀촌 정책 및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시행 등과 연계하거나 경우에 따라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 귀농·귀촌 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민관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 일선의 귀농·귀촌 관련 업무가 행정기관 일변도로 진행될 경우 민원 업무 증가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정책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따르기도 한다.
 -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 지원 업무의 일정 부분을 귀농·귀촌 지원센터나 귀농·귀촌인 단체 등 민간 조직에서 담당토록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지자체 담당자 조사 결과 41.6%(101개 시·군 중 42개 시·군이 해당)가 귀 농·귀촌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 조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문호 등 2012).
- 민간단체 구성은 최근에 들어서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이전에 구성되어 활동한 사례는 드물고, 주로 2009 년 이후에 관련 단체들이 결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자체의 귀농·귀촌 시책 추진을 관 일변도로만 하기보다는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시·군 담당자 사이에서도 확산 되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17)

¹⁷⁾ 귀농·귀촌 분야 민간 조직에서 벌이는 활동 내용은, 공통적으로 시장·군수를 비롯





주: 박문호 등(2012) 조사 자료를 기초로 재집계.

- 귀농·귀촌 분야의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활동 내용을 조사한 결과는 <그 림 3-2>와 같다.
 - 지역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 대상의 상담 역할 같은 것은 공통적으로 대 다수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하지만 주택 및 토지 알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실시 등 보다 높은 수준의 활동은 2009년 이전 구성된 단체일수록 추진 비율이 높다.
 - 활동 경험이 축적되면서 귀농·귀촌 분야 민간단체들의 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 행정 담당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활동, 귀농·귀촌인의 친목활동, 신규 귀농인의 멘토 기능 등이다. 행정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사무직원(상담 안내, 홈페이지 관리 등) 인건비 또는 위탁사업으로서 현장교육사업, 도농교류, 귀농인의 집 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박문호등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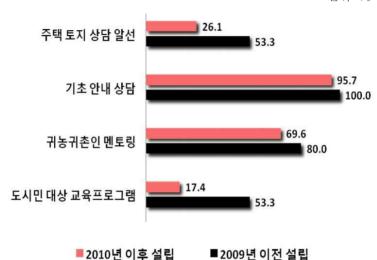


그림 3-2. 귀농·귀촌 분야 민간단체에서 수행 중인 활동 내용 단위: %

주: 지자체 귀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로서 각 활동에 대하여 민간단체에서 수행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집계.

자료: 박문호 등(2012)의 조사 자료 재집계.

- 행정의 역할을 보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 성과를 지자체 담당자들도 실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5>는 지자체의 귀농·귀촌 시책의 세부 항목별로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항목에 대해 민간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경우 시·군 담당자들은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지자체의 귀농·귀촌 시책에서 민간 조직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시·군 담당자들도 인식하고 있다.
 - 민간 조직의 설립 시기에 따라 각 단체에서 수행하는 활동의 수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지역별로 민간단체의 활동 경험이 축적되고 그 역할의 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귀농·귀촌 시책의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

표 3-5. 지자체의 귀농·귀촌 시책에 대한 시·군 담당자 평가

구 분	시·군 (민간단체	전 체	
	있음	없음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조직 체계	22.0	13.8	17.2
귀농·귀촌 관련 상담 및 안내	42.9	32.8	37.0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 및 소득 지원	19.0	5.2	11.0
귀농·귀촌인 대상 주거 관련 사업	7.1	8.6	8.0
귀농·귀촌인의 네트워크 구축 등 사후 관리	26.2	5.2	14.0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기여를 촉진	26.2	10.3	17.0
지자체 정책 종합 평가	26.2	8.6	16.0

주: 1) 박문호 등(2012)에서 실시한 시·군의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를 지자체 유형에 따라 재집계.

2.2.. 귀농·귀촌으로 인한 영향

- <표 3-6>은 귀농·귀촌이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세부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인데, 귀농·귀촌 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구성 여 부에 따라 응답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다.
 - 민간단체가 활동 중인 지자체일수록 지역사회 유지, 농어업 인력 확보,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주민 삶의 질 증진 등에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관련 단체들이 지자체의 귀농·귀촌 시책을 분담하는 단계에서 발전하여 지역사회의 제반 현안들에 대해 나름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²⁾ 각각의 항목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자료: 박문호 등(2012)

표 3-6. 귀농·귀촌이 농어촌 발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시·군 구분 (민간단체 구성 여부)	
	있음	없음	
인구 증가로 지역사회 유지에 도움	<u>69.0</u>	60.3	64.0
농어업 후계 인력 확보에 도움	<u>52.4</u>	44.1	47.5
농식품 가공, 유통 등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에 도움	<u>52.4</u>	30.5	39.6
문화여가, 복지서비스 등 주민 삶의 질 증진에 도움	<u>42.9</u>	33.9	37.6
농촌 학교 유지 등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	42.9	47.5	45.5
도농교류 활성화에 도움	57.1	52.5	54.5
창의적, 혁신적 리더십과 문화의 확산에 도움	42.9	45.8	44.6

주: 1) 박문호 등(2012)에서 실시한 시·군의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를 지자체 유형에 따라 재집계.

- 한편, 위와 엇갈리는 평가 결과도 나타난다. <표 3-7>은 귀농·귀촌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지자체의 업무 담당자들이 평가한 결과이다.
 - 땅값 상승이나 임차지 경합 등으로 기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분쟁과 갈등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민간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시·군일수록 더욱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 귀농·귀촌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불러오는 측면이 있다. 민간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시·군일수록 귀농·귀촌의 그러한 양면성이 더욱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²⁾ 각각의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자료: 박문호 등(2012)

표 3-7. 귀농·귀촌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사회의 부정적 영향

· 구 분	시·군 (민간단체	전 체	
	있음	없음	
토박이 주민에 경제적 피해(땅값 상승, 임차지 경합)	54.8	48.3	51.0
지역사회 내부의 분쟁과 갈등 발생	57.1	46.6	51.0
토박이 주민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상처	31.0	34.5	33.0
농촌 마을에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	14.3	12.1	13.0

주: 1) 박문호 등(2012)에서 실시한 시·군의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를 지자체 유형에 따라 재집계.

3. 소결

- 지금까지 귀농·귀촌인이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다각도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 마을 도농교류사업이나 각종 경제활동의 경우 귀농·귀촌인들이 분포하는 곳일수록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기존 주민들이 담당하는 데 제약이 있는 활동들에서 귀농·귀촌인이 기여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 조직 차원에서도 귀농·귀촌인의 활동이 갖는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귀농·귀촌인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는 지자체의 경우, 먼저 이주해 온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새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의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하여 귀농·귀촌 시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²⁾ 각각의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자료: 박문호 등(2012)

- 아울러 이러한 민간단체의 활동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자체의 파트너로서 수행하는 역할도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민관협력적인 정책 추진 체계가 형성되는 계기가 귀농·귀촌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형성되었다는 의의도 찾을 수 있다.
- 해당 민간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 할을 했다고 평가되지만, 동시에 지역 내 갈등을 불러오고 기존 주민들의 이해관계에서 경합하는 일을 진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이는 지역에 따라서는 귀농·귀촌 단체가 주민 및 지역사회와 유리된 채 귀농·귀촌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으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 앞으로는 귀농·귀촌인들의 활동과 농어촌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 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기존 주민과의 잠재적인 갈등 발생 소지를 완화하면서 이주 희망자나 신규 유입 도시민의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을 이끌 수 있는 귀농·귀촌인 활동의 경험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4장의 사례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 4 _장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 사례

- 최근 귀농·귀촌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부 농어촌 마을에서는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많은 곳에서 귀농·귀촌인의 활동으로 인하여 마을이 활성화되거나 주민 소득이 증대되기도 한다.
- 이는 귀농·귀촌인이 농어촌에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거나, 새로운 소득 사업을 주도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도 해당 작물이나 사업을 보급하고 있 기 때문이다. 한편 평생교육이나 문화 서비스에 소외된 농어촌 주민들을 위 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 여하기도 한다.
- 이와 같은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지역사회 활동 사례들을 찾아보고, 그 시 사하는 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개별 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에서의 활동들이며, 둘째는 귀농·귀촌인 단체와 행정이 연계한 민관 협력 지원체계 구축 사례이다. 개인 및 마을 활동 사례는 도농교류 및 마을사업 활성화 사례, 삶의 질 향상 사례, 경제(기업)활동 활성화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개인 및 마을 단위 활동

1.1. 도농교류 및 마을사업 활성화 사례

1.1.1. 상주시 승곡마을 꾸러미사업

□ 추진 배경

○ 귀농·귀촌인은 도농교류 등 마을 활성화 사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상주 시 승곡마을의 꾸러미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승곡마을의 귀농·귀촌인 들은 핵가족이 대부분인 현대에는 다량소품목 생산체계보다 소량다품목 생 산체계가 효율적이며 농가에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꾸러미사 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꾸러미사업은 제철농산물과 전통 먹을거리 등을 수요자에게 배송하는 것으로서, 소농들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소농 협업을 통하여 저투입·저비용 농사, 소량다품목 생산이 가능했으며, 윤작, 간작, 혼작, 전작에 기반한 생태적유기농업이 가능했다.
 - 꾸러미는 제철 채소류, 산나물, 과일류, 유정란 등과 장류, 떡, 우리밀 빵, 두부, 참기름, 들기름 등 농가형 가공품을 조합하여 구성된다.
- 한편 꾸러미사업 외에도 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농촌체험, 농민장터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귀농·귀촌인은 이러한 사업에 사무장이나 문화유 산 해설사, 체험마을 간사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을청년회, 마을 풍물패 등의 활동은 물론, 재능을 살려서 마을 주치의(침, 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림 4-1. 상주시 승곡마을의 꾸러미사업(상)과 도농교류 활동(하)

□ 성과 및 의의

- 특화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나 대량 생산이 가능한 대농 등을 활용한 사업이 아니라, 소농들을 주 대상으로 소량다품목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영 세고령농이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에서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체험학습을 병행함으로써 꾸러미사업에 대한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 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1.1.2. 양양군 영농조합법인 달래촌

□ 추진 배경

○ 달래촌은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에 있는 산촌마을로서, 자연환경이 오염 되지 않은 오지 마을이다. 청정환경을 활용하여 '자연치유휴양마을'을 조 성하고 있다.

○ 이에 앞서 마을 주민들이 출자하여 2010년 7월 「영농조합법인 달래촌」을 설립하고, 마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 첫 마을소득사업으로 50평 규모의 유기농산채 뷔페식당 '달래촌'을 개업하였다. 주민 출자금으로 5년 임대료 1,000만 원을 선지급하였으며, 8년간 방치되었던 빈집을 직접 리모델링하고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10년 10월에 개업하였다.
- 강원도가 지원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면서 겨울 농한기에는 주민 교육과 선진지 견학, 친환경교육, 봄에는 마을환경정비와 화단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5억 원의 혁신역량사업비를 지원받았다.
- 달래촌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갈등, 주민끼리의 반목, 불신, 민원 제기 등으로 갈등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하여 정월대보름축제 '달래촌 솟대야 달맞이 가자!'를 개최하였다. 솟대세우기 행사, 농악놀이, 오곡밥 먹기, 달집태우기 등의 행사를 하면서 주민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봄에는 달래촌의 산채를 활용한 청정비법밥축제를 하면서 다랭이 논에 손모내기, 못밥먹기, 삼형제봉·시루봉 등산로 개설 등반대회, 산신제 등을 개최한다.
-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와 마을 홍보를 위한 '달래촌 샘골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양양군 관계자 등 외부인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은 후원을 받아 개최하였으며, 달래촌을 외부에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 2010년 10월 '달래촌'이 개업하면서, 군수, 면장, 의원, 유관단체 기관장, 주민, 언론사 등이 참석하여 청정산림자원을 활용한 장기스테이 치유마을의 첫걸음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아토피 없는 마을 달래촌' 선포식을 했다
- 지금까지 11개 코스 32km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마을 달래길'을 주민들이 직접 조성하였다.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산림청 등산로사업비(2012년 1억 4,000만 원)가 투입되어 6km를 새로 정비하고 있다.

□ 성과 및 의의

○ 달래촌의 사례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귀촌인 한 사람을 통하여 마을에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되었고, 마을 소득사업은 물론, 마을 내부 갈등이 해소되기도 하였다. 마을을 위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가 또는 일꾼이 부족한 오늘날의 농어촌에서 귀농·귀촌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1.1.3. 기타

□ 산청군 신안면 갈전마을(민들레공동체)

- 갈전마을의 가구 수는 77호이다. 이 중 귀농·귀촌 가구가 34호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 이들 귀농인을 중심으로 민들레공동체를 조직하고 태양렬, 풍력, 바이오매 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학습장과 주택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 자원을 기반으로 태양열 에너지 학습프로그램, 자가발전을 이 용한 음식만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자원을 활 용한 약초 및 한방차 관련 체험프로그램, 민들레베이커리 카페 운영으로 한

방식품을 홍보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 하동군 적량면 서리(효소작목반)

- 효소가공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귀농인이 마을에 이주해 오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처음 효소가공업을 시작할 때에는 주민들의 관심이 없었으나, 이후 귀농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소득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 이후 해당 귀농인의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마을 사람들도 효소가공업에 참 여하게 되었다. 귀농인을 중심으로 하는 효소작목반이 조직되었으며, 마을 의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2. 삶의 질 향상 사례

1.2.1. 옥천군 안남면 지역공동체(배바우 작은도서관 외)

□ 추진 배경

- 옥천군 안남면의 인구는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약 1,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노인이 과반을 넘고 있다.
- 향후 10~20년 후 마을과 면이 남아있을까라는 위기감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생산 활동과 더불어 교육과 문화, 보건, 복지가 지역 내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주민 자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어머니학교를 통하여 어머니 세대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 및 자존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면사무소 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 사업을 시작하여 면사무소의 지원이 있었으며, 실제 운영은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2회 수업이 이루어지며, 현재 3개 반이 운영된다.
 - 매년 40~60여 명의 어머니 학생이 입학하는데, 2008년부터 졸업생이 초급 과정 교사로 다시 봉사하고 있다.

그림 4-2. 안남면 어머니학교





- 안남면 주민 축제로 매년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마련하는 '작은 음악회'가 개최되고 있다. 2002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이하 민예총) 옥천지부에서 기획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개최되었는데, 안남면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주민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민예총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안남면 내 7~8개 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냈으며, 현재는 주민자치센터가 추진하고 있다.
- 기존에 있던 여성농민회로 구성된 풍물패와 농가주부모임이 주축이 된 풍 물패 등 두 개의 풍물패를 통합하여 둥실풍물단을 조직함으로써 안남면 행

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 체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 기존 두 풍물패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통합 풍물패가 만들어지면 서 함께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차 화합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
- 배바우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작은도서관사업'으로 건립되었다. 자립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추진위원회가 여러 지역의 도서관을 견학하며 운영 방법을 고민했고,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 현재는 100여 명의 후원회원이 매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배바우 도서관에서는 인문학 강좌(작가 선생님과 만나기), 책 읽어주기, 서예교실, 종이접기, 어린이 농장, 천체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회의와 모임의 장소로도 이용된다.
- 2008년부터 배바우 도서관에서는 도서관과 안남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배바우 소식지가 발행되고 있는데, 최근 안남면 마을신문으로 격상되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안남초등학교 및 안남중학교 신문반 학생들이 편집을 맡았으며, 주민 기자들이 집적 찍은 사진과 글들로 지면이 채워진다.
 - '배바우마을신문'은 월간으로 현재 20호째 나오고 있으며, 2012년 8월 에는 정기간행물 등록도 했다. 향후 협동조합으로 자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 또한 배바우 도서관은 안남면 내 각 마을과 면 소재지까지 순회하는 버스 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안남면 커뮤니티 버스를 운용하고 있다. 안남면 내 노인층과 방과후활동에 참여하는 초등 학생이 주 이용자이며, 각 마을을 연계하는 만큼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 기존 대중교통의 경우 각 마을까지 운행되지 않아 불편하였으며, 특히 학생들의 방과후활동(배바우 도서관)이나 어머니학교(주민자치센터)가 마치는 시간에는 이마저 끊겨 이동 수단이 없었다.
- 2008년 이후 현재까지 5년간 커뮤니티 버스 운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소재지 상가 거점과의 연계로 면내 시설 이용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나 타났다.







□ 성과 및 의의

- 안남면 공동체는 지속적인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 복지 등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외부의 사람보다는 서투르나마 지역의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그 일을 맡기되,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지자체를 비롯한 다른 조직과의 연계·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버스의 경우, 버스 운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운용과 여객운수법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자 체와 커뮤니티, 민간기업(운수회사)이 협력한 사례이다.

1.2.2. 진안군 행복한 노인학교 및 마을박물관

□ 추진 배경

○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은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의 노력에 힘입어 지역사회에서 귀농·귀촌인이 마을 만들기에 동참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동향면 학선리의 '행복한 노인학교'와 '마을박물관'이다.

□ 주요 사업 내용

○ 마을의 귀농인이 2008년부터 학선리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한 노인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고령인이 대다수인 마을에서 귀농인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이다. 농한기마다 한글, 컴퓨터, 미술, 요가, 연극 등을 가르쳤으며, 주민들이 직접 공연에도 참가하였다. 이는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상시 운영하는 마을학교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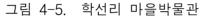
그림 4-4. 행복한 노인학교 개교 및 운영







- 이런 성과가 밑거름이 되어 2009년에는 마을박물관이 같은 장소에서 개관되었다. 진안군에서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의 지역사회 기 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을박물관 설립을 돕는 사업비 일부를 제공하였다.
 - 오래된 농기구나 옛날 사진, 3대 가족사진 등을 전시하였으며, 행복한 노 인학교의 짚풀공예반, 이야기반 등을 마을박물관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 써 실질적인 설명과 체험도 제공하였다.







□ 성과 및 의의

- 오래된 농기구나 옛날 사진과 같이 그동안 방치되었던 지역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부각시킨 사례이며, 한편으로 자신들의 물건이 박물관에 전시됨으로 써 주민들이 마을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 전시물과 이야기, 체험, 옛 가족사진 등이 어우러지면서 과거 농촌의 생활상을 배울 수 있는 학습과 교류의 장이 되었음은 물론, 출향인들의 귀농·귀촌의향이 증가되는 계기가 되었다.

1.2.3. 기타

□ 완주군 고산면 교육공동체 이웃린

- 귀농·귀촌인 다섯 가구가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교육체험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사회적 협동조합 '이웃린'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마을 빵집을 개업하여 빵을 생산하며, 그 수익금으로 빵집 운영은 물론, 배움활동이 가능하도록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 그 외에 쿠킹 클래스, 재능 기부를 통한 마을 목공소와 멘토링 등을 통하여 마을 학생들의 체험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 상주시 외서면 작은도서관

○ 귀농·귀촌인 다섯 가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였다. 작은도서관은 외서면 소재지의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건물을 임대하여 리모델 링을 거친 후 2012년 개관하였다. 지역 아이들에 대한 방과후교육 및 독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요가, 영화 상영, 풍물, 노래교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있다.

□ 상주시 농촌지역 작은학교 살리기

-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협력한 사례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지역으로 이주하고, 교내에서 체험학습과 다양 한 방과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대안학교가 아닌 공교육을 농촌 상황에 맞도록 특화함으로써 성공적인 귀 농·귀촌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사례이다.

1.3. 경제활동 활성화 사례

1.3.1. 완주군 두레농장 육성사업

□ 추진 배경

- 완주군은 민간, 행정,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통한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지역경제순환센터가 설립되었다. 센터에는 마을회사육성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로컬푸드센터, 도농순환센터, 공감문화센터등 총 5개의 중간지원조직이 입주해 있다.
-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의 일환으로 완주군은 두레농장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마을 내 공동두레농장을 조성하여 농촌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동식사를 통한 건강 증진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두레농장의 생산품은 로 컬푸드 유통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다.

- 2009년부터 매년 2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6개소의 두레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인덕농장에서는 참나물, 상추 등이 생산되며, 돈 의농장에서는 한우, 구암농장에서는 딸기와 홍양파, 상하보농장에서는 유정 란, 약암농장에서는 표고버섯이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두억농장에서는 화 덕체험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다(표 4-1).
- 개소 당 3억 4,000만 원(군비 100%)이 지원되고 있는데, 생산기반에 1억 5,000만 원, 운영(복지)에 1억 9,000만 원이 지원된다. 생산기반 지원에는 공동생산기반 조성, 작업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이 있으며, 복지지원은 공동식생활 및 공동활동 여건 조성이 있다. 또한 운영을 위한 지원에는 전담 관리인 채용 지원, 기타 제반 운영경비 등이 있다.

표 4-1. 두레농장 운영 현황

 읍· 면	조성 연도	마 을	일자리	생 산 품	소득액 (백만 원)	운 영 현 황
계		6개소	88명	9종	189	
소양면	2009	인덕	17	참나물, 상추, 부추	70	· 비닐하우스 - 8동 3,984㎡ · 공동작업장 - 1동 140㎡
구이면	2009	구암	18	딸기, 홍양파	48	· 비닐하우스 - 4동 2,672㎡ · 공동작업장 - 1동 136㎡
화산면	2010	돈의	13	한우 220두	32	· 축사시설 - 1,400㎡ ·퇴비사 - 489.2㎡
구이면	2010	상하보	13	유정란, 채소	28	· 시설하우스 - 10동 2,135㎡ · 공동작업장 - 1동 144㎡
소양면	2011	약암	12	표고버섯	11	・버섯재배사 - 7동 2,646㎡ ・공동작업장 - 1동 133㎡
용진면	2011	두억	15	화덕체험 레스토랑	진행 중	식당 리모델링, 공동 체험관, 화덕신축

그림 4-6. 인덕두레농장(상)과 구암두레농장(하)





□ 성과 및 의의

- 마을기업을 통하여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 복지 향상 등 다방 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레농장의 경우 노인을 고용함으로써 그들에 게 고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자존감을 고취시켰으며, 나아가 공동체 활동 을 통해 정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제고하였다.
- 마을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시적인 소득 증대나 일자리 창출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관련 조직과의 연계를 통하여 그 효과를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활동이 가능하다. 두레농장의 경우 지역경제순환센터 내 중간조직(로컬푸드센터)과의 연계를 통하여 두레농장의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하고 있다.

1.3.2. 상주시 토리식품

- 상주시에서는 귀농인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에 친환경농산물 가공회사를 운영하기도 한다. 공검면의 토리식품이 그 사례이다. 국산 친환경농산물을 주원료로 토마토케첩, 돈까스소스, 카레, 우리밀 부침가루 등을 생산하여 유기농 생산자단체와 전문매장 등에 납품하는 업체다.
- 2002년 일산에서 창업 후 2005년 상주시 공검면 동막리로 이전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연간 약 500톤의 원재료는 지역 작목반, 농가들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수급하고 있다.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20명은 지역 주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바쁜 시기에는 20~30여 명의 주민을 임시직으로 추가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 토리식품은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도모하는 친환경농산물 가공회사로서 인형극단 '공갈못'을 조직하고, 창착인형극 '상주함창 공갈못

에', '연밥 따는 저 처자야' 등을 제작·공연하고 있다. 또한 주부 15명으로 구성된 '공갈못 연밥노래 연구회'를 창단하고, 공갈못 주변에 산재한 이야기들을 모아 '이야기 문화지도'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 나아가 재단법인 공갈못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내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주시 동학혁명 발자취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개인 및 소규모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상주 내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 예술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토리식품 매출의 1%를 기부하고 있다.

□ 성과 및 의의

- 마을기업이나 공동체회사를 표방하지 않은 기업체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상주시의 토리식품 같은 업체는 예외적이다.
 - 농공단지 또는 지역특화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한다 거나 지역의 농산물을 수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이익을 다시 지역공동 체를 위하여 환원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토리식품은 농산물 가공제 품 생산 이외에도 지역 문화활동 활성화에도 활발히 참여하는 등 귀농 기 업인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의 새로운 사례가 되고 있다.
- 기업이 이러한 활동을 펼치는 데에는 기업 자체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의지가 있다고 해도 관련 정보가 없거나, 여건이 미흡한 경우도 많 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민관 협력 귀농·귀촌 지원체계 구축 사례

2.1. 서천군귀농인협의회

□ 추진 배경

-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모임으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과 도시민 유치 활동,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자원 활용 및 사회적 경제 활동,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융합및 농촌 사회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 서천군귀농인협의회가 정식 발족한 것은 2009년 1월이며,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참여한 도시민 농촌 유치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조직 운영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통하여 그 활동 영역을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 회원 간 상호 교류를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사랑방을 운영하여 수시로 회원 간 상호 교류를 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지역 이주·정착에 관한 정보도 전달하고 있다.
 - 품앗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회원 간 영농, 가공, 집수리 등을 함께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생의 생활을 실천하였다.
 -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여 회원들의 활동 소식과 협의회 운영과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나아가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도 발송하여 지역 정보를 전달하였다.
- 서천군귀농인협의회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기대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

록 귀농인들은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일환으로 친화경농산물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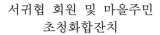
- 친환경농산물 품목은 절임배추, 무, 고추, 양념채소 등 김장채소와 메주콩이 주를 이룬다. 그 외에 방사유정란, 고구마, 양파즙, 효소(매실, 백초 등), 쌀(주문도정) 등을 생산하고 있다.
- 배추절임시설, 장류 가공시설, 건조시설 등의 가공시설과 저장고(저온, 냉동), 공동 작업장 등을 조성하여 공동 가공 및 저장을 실시하였다.
- 직거래 판매를 위하여 "자연에서 찾은 행복"이라는 귀농인 공동 상표를 등록하고, 제품 공동 출하와 원재료 및 농자재 공동 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였다. 또한 인터넷 장터와 농산물 상설 장터를 동시 운영하였으며, 지역 행사와 연계한 행사도 펼쳤다.
-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귀농체험과 실습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시민들에게 친환경 체험 및 휴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도시민 유치를 도모 하였다.
 - 1박2일 프로그램으로 귀농체험투어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차례 실시했는데, 빈집 투어, 귀농인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서천군 정착에 관심을 가진 도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놓고 선배 귀농인의 집에서 머물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도 제공된다.
 - 농촌생태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김장담그기, 장류담그기 등의 농산물 가공 과 생태건축, 생활목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2010년 11월 귀농인협의회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활동을 바탕으로 충남 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 회원들의 출자를 근간으로 사업단을 주식회사 형태로 독립시켜 나갔다. 회비와 기부금 수입은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운영비로 쓰지 않고 적립하여 자본금을 확보하고, 영업 손실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만 보전 처리하였다.
 -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 8명과 자체 고용 5명 이외에도 귀농 귀촌인,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비상근 일용직원의 수시 고용은 연 100명 에 이르고 있다.

- 발생된 수익금으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함으 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그림 4-7. 서천군 귀농인협의회 주요 활동







영농교육



신규 귀농 귀촌인 대상 도시민/귀농 귀촌인/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귀농어울림한마당

□ 성과 및 의의

-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 귀농 귀촌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모임으로 출발하 여 현재는 도시민 유치 및 소득사업 활동을 넘어, 사회적기업 역할까지 다 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귀농투어를 비롯한 서천군귀농인협의회의 활동이 조명을 받으면서 최 근에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타 지자체의 귀농인 모임 에서 서천군 사례를 배우기 위해 그동안 약 50회에 걸쳐 2.000명 가량이 방 문한 것으로 집계된다. 서천군이 귀농·귀촌의 새로운 선진지로 떠오른 것이다.
- 앞으로 서천군귀농인협의회가 역점을 둘 과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의 조직 활동은 주로 지역 주민들보다는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 로 이루어진 편이었다. 이제부터는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

으로 정착해가도록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2.2. 상주시 귀농·귀촌정보센터

□ 추진 배경

- 상주시에서는 민간 조직인 귀농·귀촌정보센터가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및 귀농·귀촌 시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주시 귀농·귀촌정 보센터는 2009년 6월 24일 개소하였으며, 외서면 봉강리 상주환경농업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다.
- 상주시 귀농·귀촌정보센터는 예비 귀농인과 귀농인을 연결해주는 중간 매 개체로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귀농·귀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상주시 귀농·귀촌정보센터는 귀농 상담, 빈집 소개, 빈집 조사 및 향토자원 조사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공동체 귀농학교 운영, 귀농 새내기, 여성귀농인, 마을 리더 양성 교육, 집 고치기 학교 운영 등 귀농인 교육 활동을 주관한다. 또한 현장 견학 및 워크숍, 도시민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귀농·귀촌 소식지 발간 및 귀농인 사랑방 운영, 귀농·귀촌 동아리 운영 및 문화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귀농·귀촌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상주시 에 이주한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 이 밖에도 귀농·귀촌인 재능 기부단 및 농촌형 사회적기업 설립 계획을 세

우고 있는 등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한편 상주시청에서는 귀농·귀촌정보센터 활동과 연계하여 2012년 4월부터 귀농·귀촌 특별지원팀을 구성하였다. 10명의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특별지원팀은 '귀농·귀촌 3,000호 육성'을 목표로 내걸고, 지역 이주 희망자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행정 차원의 지원 역할을 병행하여 진행 중이다.

□ 성과 및 의의

-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하여 귀농교육의 초점을 현장 중심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주시 귀농·귀촌정보센터는 예비 귀농인에 대한 멘토링 및 작목교육을 1박2일 숙박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때 지역의 선배 귀농인을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현장 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처럼 피부에 와 닿는 교육과 귀농·귀촌 지원 역할을 정보센터에서 수행하여 도시민이 선호하는 귀농·귀촌 목적지로 상주시가 떠오르는 데 기여하였다.

2.3. 진안군 뿌리협회의 민관협력을 통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 사례

□ 추진 배경

○ 진안군은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5대 원칙을 세우고 있다. 첫째, 새로운 도시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미 정착한 귀농·귀촌인에우선 순위를 둔다. 둘째, 농사를 안 짓고도 본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직접적인 현금 보조는 배제하고 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세심하게 제공한다. 넷째, 주민과의 화합을 중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벤트성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민관협력의 자발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지향한다.

- 진안군은 공무원 순환보직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에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제8조에서 는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군으로 이주하여 안정적인 정착 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민간 기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조례에서 명시한 민간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안군 뿌리협회'이다. 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한 160명이 진안군 뿌리협회의 회원이다. 이 단체 는 지역에 이주한 귀농·귀촌인들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고자 2009년 12월 창립되었다. 현재 진안군청이 해 오던 도 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 대부분을 인계받아 시행 중이다.

-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은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귀농·귀촌 관련 업무는 군청 아토피전략산업과의 마을만들기팀 소관으로 추진되는데, 마을만들기팀에서는 각종 지역 활성화 사업과 마을 만들기 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민간기구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 2012년 8월에는 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한 진안군의 마을만들기를 총괄하는 '(사)마을엔사람'이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12월에는 15개 단체 약 60명이 상주하는 지원센터가 개소식을 치렀다. 여기에 뿌리협회도 입주하여 진안군마을만들기를 위한 일련의 활동들 중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추진 구조를 <그림 4-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행정 주도로 시작한 마을만들기이지만 민간에서 이를 맡아서 자율적으로 추진하 는 단계로 발전시키도록 마을만들기팀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역할을 분 당하고 지역의 각종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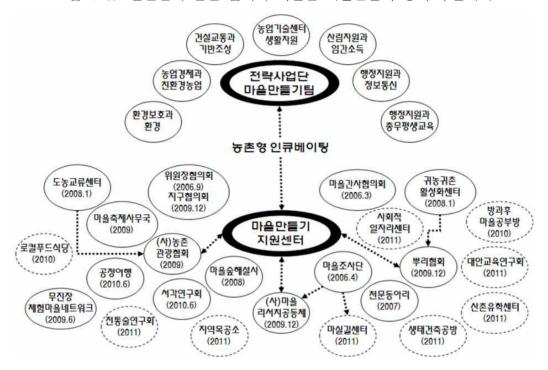


그림 4-8. 진안군의 민관 협력에 기반한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체계

○ 마을만들기를 위한 군 차원의 노력에 힘입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귀농· 귀촌인이 함께 활동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행복한 노 인학교'와 '학선리 마을박물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 성과 및 의의

-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국에 많지만 귀농·귀촌 지원 업무를 민간기구가 담당하도록 자치법규에 명문화한 곳으로는 진안군이 유일하다.
- 현재 거의 모든 지자체의 조례가 귀농인 개인에 대한 자금 지원 절차 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반면 진안군은 지역사회 내의 민간단체가 지자체와 일정한 관계 속에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나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김정섭 등 2012).

2.4. 기타

□ 창녕군 귀농인협의회

○ 창녕군 귀농인협의회는 귀농·귀촌을 한 회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귀농· 귀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귀농·귀촌인의 소득 창출을 위한 선진농가 견학 및 교육 활동, 둘째, 도시민 을 대상으로 성공한 귀농인 농장 투어 및 군 귀농 정책 홍보, 셋째, 지역 주 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재능 기부 등의 환업사업 추진, 넷째, 행정기관과 연 계하여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행사 추진, 마지막으로 서로의 정보를 공 유하고 빠른 영농 정착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자체 작목반 조직 등을 꼽을 수 있다.

□ 하동군 귀농지원센터

- 하동군의 주도로 도시민 농촌 유치의 효율성·전문성을 도모하고, 총체적 관리로 귀농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귀농·귀촌 상담 및 정보에 대해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귀농인의 집 3개소를 조성하고, 귀농업무 전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귀농인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귀농·귀촌 전담팀은 농촌사회과 내 과장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담공무원 1명, 귀농상담원 1명은 귀농·귀촌 전담인력으로서 귀농상담 및 귀농정보 제공, 귀농 홈페이지 및 DB 관리, 귀농·귀촌 정보 수집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거창군 귀농인연합회

○ 거창군 귀농인연합회는 거창군에 정착한 귀농인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 모하고, 귀농 정착을 위한 생업 현안 및 농업에 관한 정보 교환, 회원 교육, 상호간 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작목별·읍면별 귀농조직 모임체로 구성되어, 현재 14개 회에 195명이 참여하고 있다. 작목별로는 사과, 딸기, 특용작물, 오미자, 콩, 고추, 잡곡, 약초등의 작목반 조직이 있으며, 직능별로는 예술귀농인회, 여당당, 꾸러미사업단, 산천수기자단, 예비귀농 모임 등이 있다.
- 작목별 모임에서 희망 작목 예비 귀농인에게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는데, 1 차적으로는 예비귀농인과의 1:1 멘토링 추진으로 귀농 유치를 지원하고 있 다. 부차적으로는 작목별 모임 시 토론식 교육 및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내 실을 다지고 있다.

3. 시사점

- 그동안 귀농·귀촌인들이 농어촌에 이주한 후 초기 정착하기까지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런 어려움을 완화하는 일을 시·군 청과 농업기술센터 등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귀농·귀촌인 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상주시, 서천군, 진안군의 등의 사례는 민관 협력에 기초하여 귀농·귀촌 관련 시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민간단체의 활동이 초기에는 도시민의 지역 정착을 돕는 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그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도농교류 활동뿐 아 니라 문화, 보건, 교육 등 농어촌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일들로 역할의 범위 가 확대되는 것을 여러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례에서 귀농·귀 촌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가능성을 찾게 된다.

- 귀농·귀촌 관련 단체들이 스스로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해당 단체들이 지자체 귀농·귀촌 시책의 보조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체회사, 마을기업과 같은 조직을 설립하여 사회적 경제 영역 등에서 역할을 찾는 사례가 확인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 귀농·귀촌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동시에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귀농·귀촌 단체의 활동이 귀농·귀촌인들 중심의 폐쇄적인 활동으로 자리잡는 경우 주민과의 융화 문제나 갈등 발생 등의 부정적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때로는 귀농·귀촌인 단체가 이익집단 역할을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귀농·귀촌인이 기존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경합한다는 인식도 일부 주민과 지자체 담당자 사이에 존재한다.
- 지역 주민의 이익과 경합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자체 차원에서 나름의 역할 분담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도농교류 사업이나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등에 있어서 귀농·귀촌인의 전문지식과 자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 파급효과가 기존 주민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강원도 달래촌 사례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뜻이 있고 주도적인 성향의 한 사람과 마을 주민이 협력하여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같은 맥락에서 귀농·귀촌인 유치를 단순히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지역 활성화라는 목적에 따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지자 체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소득,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삶의 질 등을 포괄하는 영역에서 귀농·귀촌 시책을 연계 추진하는 시도가 그러한 선진 사 례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 최근에는 민간기업이 농어촌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된다. 이들은 단순한 이익 환원을 넘어 그 지역의 문화와 복지, 소득 향상을 위한 활동까지 수행하기도 한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 **5** 장

정책 방향과 과제

1. 정책 방향

-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고 준비하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 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기조 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최근 봄을 타고 있는 귀촌·귀농 조류가 반드시 농어촌 지역사회 발전과 양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 지역사회와 유리되어 조성된 신규 전원주거단지라든가, 폐쇄적인 양상을 띠는 귀농·귀촌인만의 커뮤니티를 사례로 들 수 있다.
 - 귀농·귀촌 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는 도시민의 농어촌 유치자체가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귀농·귀촌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는 일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의 경제 여건이나 생활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것에는 큰 위험부담이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 충분한 준비가 안 된 도시민들의 농어촌 정착 실패를 야기할 뿐 아니라지역사회에도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 농업 구조정책과의 상충 가능성을 감안할 때도 귀농·귀촌을 정책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정부 정책의 초점은 준비되지 않은 농어촌 이주로 인한 정착 실패 위험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한편,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도시민들이 불필 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 그러자면 도시민들에게 농어촌의 현실을 정확히 알리는 데 우선적으로 주력할 필요가 있다. 과연 자신이 귀농·귀촌에 적합한지 여부를 도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이 그 방법이다.
 - 농어촌 이주를 결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이전에 농어촌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나아가 다양한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귀농·귀촌인들을 포함한 민간단체의 활동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행정과 수평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민간기구 역할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민간기구가 단기적인 지자체 사업 보조 역할에 머물지 않고 지속 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이다. 지역공동체 정책 속에서 그 해법을 찾을 필 요가 있다.

2. 귀촌과 지역공동체 정책의 연계 방안

- 첫째, 지자체의 귀농·귀촌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조직 모델이 확산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이미 귀촌·귀농 목적지로 각광받는 지자체들의 경우 이러한 민간 주도의 귀촌·귀농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 따라서 귀촌·귀농인의 농어촌 적응과 정착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제반 지원 업무는 행정이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므로 귀농·귀촌 관련 단체에 역할을 부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귀농·귀촌 관련 기구의 활동을 기존 주민 조직과 연계하는 방안을 본 격적으로 모색한다. 귀농·귀촌인 중심으로 해당 단체가 운영되면서 나타나 는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 참고로 김정섭·임지은(2012)은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직 유형을 <표 5-1>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18) 이 중 실제 귀농·귀촌인이 농어촌 이주 정착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조직은 D형(일부는 C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D형 조직들의 구성 형태나 활동 내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선배 귀농·귀촌인과 정착 초기 단계의 신규 귀농·귀촌인이 주축을 이룬다. 지역사회의 신규 진입자들이 농어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이러한 조직들이 많은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이들 단체자체가 이익집단 성격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 경우 기존 지역주민들과 귀농·귀촌 단체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 전통적 지역사회 조직(A형 및 B형)의 경우 이런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19) 앞으로는 이들의 역할을 찾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

¹⁸⁾ 이하 농어촌 공동체 조직에 관한 논의는 김정섭, 임지은(2012)에 착안하여 전개하였다.

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이주자들의 영농 교육 일부를 기존의 작목반이 나 연구회, 영농조합 등에서 담당토록 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구분	순수 민간조직	지자체와 연결된 민간 조직
전통적 지역사회 조직	[A형] 마을 대동회, 계, 청년회, 부녀회 등	[B형] 생활개선회, 농촌 지도자회, 품목별 연구회, 4-H, 농업인 대학, 농업생산법인 등
귀농·귀촌 지원 목적의 조직	[C형] 지역에 소재한 귀농 교육 단체(예: 실상사 귀농학교,	[D형]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결성한 귀농인

표 5-1.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적응에 역할을 하는 조직

자료: 김정섭, 임지은(2012)

○ 셋째, 귀농·귀촌 분야의 민간단체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풀무학교 전공부 등)

협의회, 귀농·귀촌 지원센터 등

- 귀농·귀촌 지원 업무를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일자리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많지만, 그 경우 궁극적으로 조직의 지속성 문제가 대두될수밖에 없다. 수익 모델을 찾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제4장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 <그림 5-1>에 제시한 바와 같은 정부 부처별 여러 종류의 사회적 일자리 관련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표방하지 않더라도 <표 5-2>와 같이 지역공동체 정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수 시 행되고 있으므로 이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¹⁹⁾ A형 및 B형 조직은 그 자체로 고유한 목적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조직을 통해 귀 촌·귀농인들의 농어촌 적응을 돕는 시도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조직의 일원으로 좀처럼 접근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김정섭, 임지은 2012).

그림 5-1.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관련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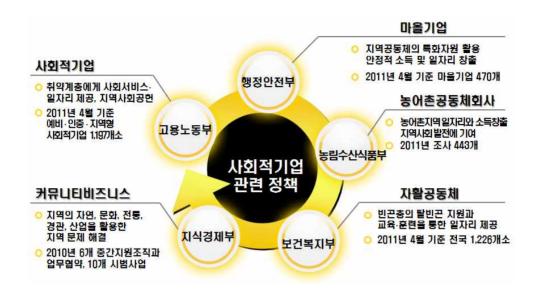


표 5-2. 부처별로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 현황

부 처	관련 사업명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깨끗한 학교 만들기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여성농업인센터, 마을사무장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장애아동 가족 지원, 노인 돌봄서비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장애인 복지 일자리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디딤돌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문화재청	문화유산 방문교육, 문화재 상시 관리활동
산림청	숲 해설

- 또한 정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발굴과 관련하여 좋은 사례를 찾아서 그 것이 확산되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므로 이러한 조직 모델을 활용할 가능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끝으로, 다음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되, 시·도 단위나 인접 시·군 간 연계협력을 통해 그러한 조직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설정토록 한다.
 - 귀농·귀촌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므로, 주민이나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 교육 기회를 제공 토록 한다.
 - 지역 차원에서 재능 기부자나 예비 귀농·귀촌인, 도시민과의 지속적인 교 류 기회를 갖도록 한다.

부록 1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촌-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세미나 결과 - 전북권 (2012. 4. 12 전북 완주) -

☑ 행사 개요

시 간	주요 내용
14:20~14:30	■ 등록
14:30~15:10	■개회식
	• 개회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원장)
	● 환영사 (전라북도 완주군 임정엽 군수)
	■기조강연
	•기조강연(지역발전위원회 홍철 위원장)
$15:10 \sim 16:20$	■주제 및 사례 발표
	●(주제발표) 귀촌과 농촌 지역공동체 정책의 연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박사)
	● (사례발표1) 완주군 귀촌인 공동체의 활동 경험과 교훈
	: 행복한 교육을 구워내는 건강한 빵굼터 사례
	(완주군 공동체 이웃린 회원 장윤정)
	• (사례발표2)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사례
	(진안군 학선리 마을박물관 이재철 관장)
16:20~16:30	■ 중간 휴식
16:30~18:10	■종합 토론 (좌장: 전북대학교 송정기 교수)
	• 지정 토론
	오영은 회장(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
	이해경 교장(남원시 실상사 귀농학교)
	조성근 회장(장수군 귀농·귀촌협의회) 유상오 대표((주)그린코리아컨설팅)
	이민수 박사(전북발전연구원)
	- 의전기 역사(전략 발전권 기원) - 조기현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 · · · · · · · · · · · · · · · ·
	김인중 과장(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과)
	박종현 서기관(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김상경 과장(지역발전위원회)
	● 종합 토론: 포럼 회원 및 참석자 전원
18:10~20:00	■폐희 및 만찬

☑ 종합 토론

송정기(전북대학교 교수)

약 30년 전 대학원을 다니면서 석사논문으로 이농·이촌에 대해서 썼는데, 30년이 지난 요즘에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참 격세지 감을 느낀다. 농촌이 연구의 주제이자, 필드가 되기도 했지만, 또 많은 것을 주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치유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등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공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앞에서 귀촌과 지역공동체 정책 연계에 관련된 기조 강연이나 주제발표 내용에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귀촌에 대한 입장이 바라보는 사람이나 행위자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이다. 연구자, 지역공동체, 지자체 등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촌을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떻게 연계하여 정책에 다룰지 토론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하나는 김정섭 박사님께서 주제발표를 해주셨지만, 사회 자본을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홍철 위원장님께서도 사회 자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사회 자본이라는 것은 공동체 문제와 관련해서 보자면 귀촌인과 원주민들이 서로 신뢰구조를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현실에서 어떠한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을지에 대한점검도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여러 부처에서 오셨는데 현장의 목소리나 한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 자본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나 관점에서도,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를 어떻게 통합하여 하나의 공 동체를 만들 것인가 하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귀촌인은 귀촌인 나름의 학교, 교육, 문화 공동체에 대한 관점이 있는 것 같다. 공동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부분이 토론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공동체, 현실, 지자체, 신뢰 등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토론자분들은 구속받지 마시고 한 분당 5분 정도씩 말씀해 주시고, 모두 말씀을 하신 후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다.

유상오((주)그린코리아컨설팅 대표)

오늘 많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먼저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한다. 귀농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정책, 시스템, 조직, 프로그램, 디자인과 같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2009년도 농식품부에서 나온 귀농·귀촌 종합대책 이외에 별로 진행된 사항이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귀농·귀촌 2030'이라든지 전체적인 방향이 제시된 계획이 필요하다. 아까 발표하신 분들도 교육이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을 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가? 지역에 연착륙시켜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할 것이다. 사업을 한 다음에는 소득이 나와야 할 것이고, 그 후 기반, 행복 등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전반적프로세스에 대한 고민과 지역 나름의 창의성이나 상상력을 동원하여 대안을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총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부분들만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그런 식으로 간다면 소탐대실(小倉大失)이라든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홍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도향촌의 시대로 가는 게 하나의 트렌드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부국강병에서 부국강복으로 가고 있다. 이는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부를 분배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 대한민국이 부의 분배가잘 이루어지는 구조의 국가인가? 우리가 후손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생각해보면, 결과는 자립적·생산적 복지를 지역 내에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할 것이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담은 국가나 우리 후배 세대들이 해야 할텐데 과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김정섭 박사님께서 흥미로운 발제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 과는 다른 것 같다. 공익성을 내세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 능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소득을 사회적 환원 내지 분배하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일이지만, 분배나 공익성을 먼저 내세우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은 기업의 영리추구의 목적성을 상실하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지속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바람직하고 좋은 논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속가능성, 연속성이 없는 기업은 지금까지 망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더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다. 크게 보면 향촌이라는 부분은 '이인삼각'이라고 생각한다. 도시민은 농업, 지역의 토지, 기후 등은 모르지만 머리는 좋고 마케팅, 경영능력 등은 우월하다. 이는 머리만좋은 앉은뱅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손과 발이 뛰어나고, 현실감각이나 오감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이 융복합화 되어 마케팅 능력을 발휘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물건을 팔아낼 수 있느냐가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 합리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성화가 가능한가인데,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이인삼각'과 같이 조화롭게 만드는 게 정부나 국가의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셜믹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 귀촌 후 농업으로 가야지, 농업부터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주민과의 친숙·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재철 관장님께서 초기에 겪었던 선 존중(지역사회의논리를 존중), 후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결국 갈등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향혼인과 원주민의 공동교육이 되어야 소셜믹스가가능한데, 지금은 귀농·귀촌교육만 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농식품부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했을 때 교육을 농촌 주민들만 시켰지, 도시민에게는 시키지않았다. 이제는 같이 교육을 시켜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귀농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시 귀농·귀촌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생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진안군이 350만 원을 지원해 주신 사례와 같이, 반은 농업을 하고 반은 도시에서 하던 일을 소위 지역사회에서 다운필

터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새로운 가치를 향해 만들어지면서 소득, 사회, 문화가 혼합되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도시에서 하던 일이 지역사회·농업과 결합을 해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예를들어 마케팅을 잘하는 도시 사람이 지역에 가서 농사만 짓는다면 지역사회 발전이 아닌 지역사회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점들이 현실적으로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유정규(지역재단 상임이사)

김정섭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귀농 귀촌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김정섭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귀농·귀촌에 접근하는 세 가지 시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예를 들면 왜 개인의 거주 이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는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성찰 없이, 필요하다는 전 제하에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김정섭 박사님께서 귀촌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뒤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자료집 p.27에 표 1을 보면 2000년도에 동에 서 읍면으로, 즉 귀촌한 사람이 92만 6,000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 2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4,067가구에 9,732명이다. 그럼 이건 통계의 집계 기준이 다른 것이다. 앞에 표 1에서 말했던 도시와 농촌의 인구이동과 뒤에서 김정섭 박사님께서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논리는 조금 다른 얘기 같다. 10년 후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학선리에 귀농·귀촌해서 활동하 는 사람들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의 농공단지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구별 해서 봐야 하는데 앞에서는 같이 보아 20대가 많다던가, 베이비부머의 귀촌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뒤에서는 귀촌 문제를 학선리를 대상으로 하는 논 리 전개가 아닌가 싶어 말씀을 드린다. 또 한편으로는 2005년에 20대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귀촌귀농 문제와 동일선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귀촌귀농 정책은 준비단계에 대한 지원이었고, 정착단계의

지원은 부족했던 게 아닌가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실적으로 저도 조사를 해보니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정착단계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아쉬웠다. 그리고 귀농·귀촌 지자체들의 얘기를 하면서 전국의 62개 시·군과 5개 광역도가 조례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조례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보완되면 좋겠다.

앞의 내용은 발표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지금까지는 농촌·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농자(農者)의 시각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도시민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까 발표에서 나왔던 것처럼 도시민들이 적게는 47%, 많게는 74%까지 나중에 귀농·귀촌하겠다고 한다. 도시민의 귀농·귀촌 수요가 많이 있는 것이다. 그 수요가 현실화될 것인가, 아닌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귀농·귀촌 문제는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도시민의 전원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까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만 한정하지 말고 도시민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전 부처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서는 도시민의 전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해서 도시 측에서 바라보는 귀농·귀촌 플랜을 계획하고, 농촌 지자체 측면에서는 농촌 활성화, 인력 조달을 위해 어느 정도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와야 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 측면과 농촌 측면의 요구가 같이 충족되는 정책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과 귀촌은 현실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귀촌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귀농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은 시각을 달리해서 보아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귀농인과 귀촌인의 정책적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요구를 정확히 짚어서 정책화해야 그 효과가 발휘될 것 아닌가 생각한다.

세 번째, 귀농·귀촌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농촌의 생활, 삶,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했 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당신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하는 데 정부 정책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기여했다는 의견이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 아니 고, 기존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한 후에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는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농촌의 삶이나 가치가 중요한데 이러한 가치를 귀농인에게 정확히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교육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귀농·귀촌 교육은 영농교육, 경영기법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교육들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더불어 농촌의 가치나 문화를 이해시키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에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완주, 진안 등의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일자리 중에는 한편으로는 소득을 위한 일자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위한 일자리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귀촌인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할일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치를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자들에게 조사한 결과,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0% 이상이었으나, 실제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약 4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즉, 아직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 재능을 어떻게 현장으로 유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귀농·귀촌 개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논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영은(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 회장)

고창군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그 가운데 갈등 및 문제 등을 기반으로 말씀

을 드리려 한다. 고창군의 경우 2011년에 귀농·귀촌한 분들이 1,300여 분 정도이다. 3~5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귀향이었으나, 지금은 연고 없이 내려오는 사람이 70%에 달한다. 그리고 고창은 귀농인이 대다수로, 귀촌인은 약30~40% 정도이지만, 이들도 차후에 농사를 짓게 되면서 결국 귀농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고창군은 귀농·귀촌인의 활동과 그들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고창군(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본 협의회 등 3자 체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이다. 행정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귀농·귀촌 학교를 운 영하는데, 처음 내려오게 되면 이 교육을 받게 하고, 협의회 회원들과의 멘토링 을 맺어준다. 그리고 군수를 학장으로 하는 농촌개발대학이 있는데, 교육은 월 2회 1년 과정으로, 귀농·귀촌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촌개발대학 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교육들을 받다보면 지역민과 자연스럽게 어울 리게 되고 융화할 수 있음은 물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품과, 복분자개발과 등 다양한 학과가 있는데, 자신의 적성과 목적에 적합한 과를 선택하고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보통 귀농인들은 농업 자체를 크게 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2차 가공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강소농으로 육성하고 있 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귀농인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 제 경우 베리류의 생산, 가공, 유통(인터넷)을 직접 하여 2011년 매출이 7억 5,000 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귀농인들은 신규 귀농인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또는 기 존 주민들의 생산품을 대리하여 유통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귀농·귀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 더불어 빈집(주택), 땅(농지) 구하기 또한 중요하다. 고창의 경우 빈집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은 대부분 농촌 마을로 들어오고자 한다. 문제는 빈집은 많지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내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를 주어 자연히 기존 마을로 들어가게 한다면, 마을 주민들과 융화되고 갈등도 감소할 것이다. 교육 부분도 정부에서 지속적 투자를 해주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도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에서 이주해 오면서 땅이나 빈집을 구하려는 사람은 많다. 작년의 경우 '귀농의 집' 5채를 만들어, 1년 동안 임대를 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거의 1년 안에 땅이나 집을 스스로 마련하여 정착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도 빈집을 정리하여 제공한다면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귀농의 집 10~20채정도 더 필요한데, 땅을 사고 싶어도 3년씩 기다려야 하고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는다.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해경(실상사 귀농학교 교장)

실상사 귀농학교는 1998년도에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시작하였다. 이 당시 도시에 귀농학교가 많이 생겼는데 농촌에서 실습할 공간이 없었다. 실상사에서 이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15년째 하고 있다. 이지역에는 현재 귀농 인구 400여 명이 있는데, 면 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셈이다.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초등학교가 늘어나고, 중학교가 유지되고 있으며, 젊은 귀농자가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귀농인이 직면하고 있는 원주민과의 갈등은 항상 안고 가는 것이다. 우리 지역도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있다. 원주민은 '뺏기는 것 아닌가', '외지인이 들어와 가져간다' 등의 생각들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선입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귀농·귀촌을 왜 하려는지, 그 동기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데, 크게 은퇴세대와 실버세대, 젊은 세대로 그 동기가 나뉘어진다. 고도의 경제사회에서 벗어나고픈 사람, 소득은 낮아도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람, 농촌에서 경제적인 것을 누리려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농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해택을 누리겠다는 사람이 많다.

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귀농·귀촌 교육이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 쪽으로 바뀌었다. 이를 위하여 대학을 통해 교육을 제공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농촌에 얼마만큼 기여할 건지, 도시의 삶을 이어갈 건지에 대한 마음가짐 등에 있

다. 실상사 학교는 남원시에서 받는 지원 외에는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향과 정책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득이 아닌 어울림, 더불어 가는 교육을 추구한다. 마을만들기도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소득, 일자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체회사, 마을기업을 해보려고 해도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홍동면의 사례는 지난 50년 동안의 교육 효과라고 본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려면 한 세대가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는 고작 15년이지난 셈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조성근(장수군 귀농·귀촌협의회장)

장수군을 보면 실상사 졸업생이 많은데, 그분들은 주민들과 잘 어울려 산다. 저는 간단한 소개와 제안을 하겠다. 20대 후반에 20만 원을 가지고 귀농을 했다. 젊은 귀농인들 애환을 많이 알고 있다. 지금은 8,000여 평의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다. 친가와 처가 옆 마을에 살고 있다. 우리 협의회를 소개자면, 2008년에 설립되었고, 귀농인 중에 친환경, 유통 분과를 조직하였으며, 영농법인을 조직하였다. 현재 41명이 가입되어 있다. 또한 귀농인과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교육분과를 만들었으며,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장수군도 실상사와 같이 현장 밀착형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우리 교육생 중 70%이상은 장수로 귀농할 듯한데, 행정에서 도움을 주시면 90%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에서 여성들은 참여도가 낮았다. 그래서 여성 분과를 만들어서 일자리 나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전라도에서는 2학기부터 친환경 급식 예산이 나오는데 장수군의 경우 친환경 쌀만 들어가고 있다. 귀농인 한 분이일반급식 가격으로 넣어 주고 있다.

김정섭 박사님이 말씀하신 공공적 기업가 정신에 맞는 20~30대의 젊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40대인데 귀농 초인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막내이다. 귀농학교 역시 2030세대, 지역 청소년, 귀농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켜 애향심을 키워주려 하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을 제안할 때 기반이 없는 젊은 세대를 유치시키고 지역에서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발현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한다.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간략히 4~5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가 명료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마을 단위 사업은 한 부처만의 사업이 아니고 범부 처적으로 유기적인 연계가 있었을 때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해야 하는가? 총리실, 위원회, 누구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도할 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위가 행안부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둘째, 경험상 말씀을 드리겠다. 농사를 망치고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결국 도시에서도 빈민층이다. 귀농·귀촌은 역할과 대상이 다르다. 귀촌은 농업이 아닌 안락감이나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귀농은 도시민과 토착민의 정서적 융합을 강조하는데, 연계·협력 사업 위원회가 강조되어야 의미가 있겠다. 일본의 정주권 사업에 있어서 최근의 트렌드가 바로 그러하다. 시정촌 간의 연계협력을 다루는 것도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귀농은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심도시와 인근 농촌 간의 협력 사업도 의미가 클 것이다.

셋째, 예산 지원 방식 조정이 필요하다. 마을 단위 개발사업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관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역위가 다룰 수 있는 예산이 광특회계니까 지역위가 광역계정 사업 으로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행안부의 '참살기좋은마을사업'은 대규모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실패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조금씩 지원하되, 지역위에서 민간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귀농·귀촌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각 부처에서 하는 예산사업들을 책자로 묶어 정책

홍보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잠재적 욕구는 많은데 실제 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다.

이민수(전북발전연구원 박사)

유럽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다. 유럽의 경우 농촌이 흡입하는 힘이 더 강하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에서 배출하는 힘이 강한 면이 있다. 공공적기업가 육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것이 일반화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성공사례의 대부분은 사람 때문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일반적인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 대개 어려움을 참고 견딘 사람들이 많다.

농촌의 흡입력이 작지 않나 생각한다. 고향이라는 곳이 사실 편하지가 않다. 나가 놀기 어렵고, 도로도 위험하며, 축사로 인한 냄새가 불편하다. 실제로 제 가 전주 살다가 완주 몇 군데를 돌아보았는데, 별로 살고 싶은 마을이 없다. 특 별한 사람이 아니라도 살고자 하는 매력이 없다. 중요한 것은 농촌의 매력을 키워 도시민에 대한 흡입력이 강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역위 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농촌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주민 주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70대 노인이 손자 때문에 집을 또 지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상경(지역발전위원회 과장)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왜 귀촌을 지원해야 하는지 논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명확한 목적이 있다. 내려가서 기여하라. 그래야 정부가지원할 것이다. 거기에 정부가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귀촌의 기준을 1)사업가형(영농 목적) 2)전원형(전원적 가치의 삶) 3)은둔형(특정 목적, 치료 및 요양, 전원형으로 왔지만 못 어울림. 사회적 문제 일으킬 수 있음) 등

세 가지로 분류하며, 그 분류에 따라 정책의 목표를 다르게 잡아야 한다.

이러한 선상에서 필요한 것은 첫째로 일자리이다. 사업가형은(영농 귀농)은 소득이 있지만 전원형을 통해 실제로 일자리 창출 여건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역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온다. 둘째, 주거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그 전에 많이 있었으므로 생략한다. 셋째, 토지의 문제이다. 농어촌 공사를 통해 토지를 받아보려 했지만 전업농이기다리고 있어 안되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도 자녀교육(학교에 대한 문제)과의료에 대한 문제가 있다.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대안학교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대안학교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의료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농촌에서의 의료는 어렵다. 특히 은둔형 귀촌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도시에는 복지사가 케어를 하는데, 농촌도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종현(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서기관)

김정섭, 유정규 박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귀촌 유인책을 넘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잘 살고 윤택하게 하는 게 궁극적이 목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행안부의 마을사업 대상 중에 잘되는 마을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훌륭한 리더가 있고 귀농하신 분들이 많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여러 가지고민을 하게 되었다. 가슴 깊이 새겨 듣고 좋은 정책 만들겠다.

신현택(전라북도 삶의 질 정책과장)

TF 팀을 모시고 귀농 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았는데, 삶의 질 정책에서 선도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는 전문성도 없고 하여, 우리 추진전략으로는 수도권에 귀농학교를 만들어 서울에 3기로 120명 운영해 볼 계획이다. 체험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할 계획이다. 귀농귀

촌인의 유치보다 정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도는 유치전략을 썼다.

도와 귀농·귀촌 센터를 만들었다. 중간조직 여론조사 사후 조치로 4월 5일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준비 중이다. 홈페이지 종합안내, 멘토 교육, 컨설팅 등을할 계획이다. 농진청에서 하는 귀농·귀촌 센터 운영도 할 예정이다. 우리 전북도에서 호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농가주택 수리사업은 2011년 100호에서 2012년에 200호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관한 지원 조례를 상정해 놓았다.

김인중(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과장)

과거에는 농업정책을 강조하고 공간, 농어촌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2000년도 들어와 농어촌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중을 증대시켰다. 그 일환으로 2011년 직제 전환이 있었는데, 농어촌정책국이 선임국이 될만큼 농어촌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 귀농·귀촌을 올해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보고 대통령께 보고한 바도 있다.

귀농·귀촌과 관련해 정부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는 김정섭 박사님 말씀처럼 개인적 이사인데 왜 지원하는지에 대한 시각도 있었다. 개인 또는 지자체가 할 일이라는 반응들이 많다.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귀농·귀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중이다. 중요한건 삶의 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그 양이 결정될 것이다.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해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관련될 수밖에 없지만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농식품부이다. 농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창 복분자, 문경 오미자 등 최근에는 가치를 높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유무형 자원의산업화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R&D, 사업 자금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고민하고 있다.

정착 단계에 대한 지원이 이제까지 충분치 못했다.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주 후 정착 단계에 관해서는 사실 중앙정부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중앙 정부에서 이러한 지

자체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며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지원의 한 방법으로 생각한 것은 지자체의 기획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간조직인 농촌활력창출지원센터를 만들고, 기획 기능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귀농과 귀촌을 분리해서 정책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농어촌 정책을 '삶의 질'과 '지역개발'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삶의 질 정책의 프레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 정책 방향이다. 삶의 질 위원회안에 관계 부처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삶의 질 위원회의 틀 내에서 귀농 또는 귀촌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송정기(전북대학교 교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농촌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농촌·농업 경제화의 문제, 거버넌스의 문제, 사회 공동체로서 사회 재구조화, 귀농·귀촌을 농업·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농식품부만의 문제가 아닌 범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홍 철(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면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올 사람은 다 온다. 농촌 재구조화, 농업의 문제, 농촌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문제는 하루아침에 안된다는 것이다. 귀농·귀촌인이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져야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촌의 현실에 제대로 된 생산 인력의 공급 문제가 있는데, 이를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해결하려면 도시로부터 충원이 되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농촌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농촌의 니즈에 대해서 매칭을 시켜야 한다. 개인의

이주이니 정부가 개입하지 말하야 한다는 주장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귀농·귀촌에 대해 꼭 지역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를 보면 실 질적으로 농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농업 중에서도 농산물 수급에 집중되었 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식품부가 농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행안부 등 다른 부처에서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너무 일자리 창출 등의 수치에 연연하다 보니 공동체의 본질, 즉 농어촌의 문화나 가치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면이 있다. 농촌에 니즈가 있고 도시에서 오려는 수요가 있을 때 정부가 고민을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농촌의 니즈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사실 이를 지원 할 여건이 부족하다. 중앙정부에서 농촌에 대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연계하거나 정리하면 이를 위한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 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다. 어쨌든 체계적으로 민간, 중앙정부, 지자체 간의 연계 시스템, 체계적인 역할 분담, 계획 등이 이루어진다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 가능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와 행안부가 이 분야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좋은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부록 2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촌-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세미나 결과 - 경상권 (2012. 5. 31 경북 청도) -

🛮 행사 개요

시 간	주요 내용		
1일차			
$13:50 \sim 14:00$	■ 등록		
$14:00 \sim 14:10$	■개회식		
	• 개회사(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환영사(이중근 경북 청도군수)		
$14:10 \sim 15:00$	■주제 및 사례 발표		
	●(주제발표) 귀촌과 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방안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사례발표1)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활동 사례		
	(조원희 상주시 귀농·귀촌정보센터장)		
	●(사례발표2) 지역공동체의 활동 사례와 활성화를 위한 대안		
	(유수상 거창군 이웃사랑복지재단 월평빌라 원장)		
15:00~15:10	■중간 휴식		
$15:10 \sim 16:50$	■자유 토론 (좌장: 채상헌 천안연암대학 교수)		
	● 지정 토론		
	김성광 청도군 귀농인연합회 회원, 前 영남대학교 교수		
	김재경 사)커뮤니티와경제 소장		
	윤승철 하동군 농촌사회과 계장		
	석태문 지역발전위원회 팀장		
	김병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사무관		
	• 자유 토론: 포럼 회원 및 참석자 전원		
	● 토론 맺음말		
	소기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16:50~19:00	■분과별 토론장 이동 및 토론		
19:00~20:00	■폐회 및 만찬		
	2일차		
09:00~13:00	■ 현장 방문		

☑ 종합 토론

채상헌(천안연암대학 교수)

귀농 인구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증가했고, 3~4년 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전의 귀농은 막연한 환상을 따르던 도피형 귀농이었는데 최근에는 구체적 계획을 통한 귀농의 형태가 되었다. 타의에 의해 정해진 가치로 사는도시 생활을 벗어나 육체적·경제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농촌 사회를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농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들은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신의 필요로 농촌에 온 것이다. 자신이 농촌을 지킨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태도로 는 농촌 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귀농을 권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귀농을 도울 수는 있지만, 귀농을 의무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귀농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옳다. 공무원과 지역 농민들이 협심하여 귀촌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광(청도군 귀농인연합회 회원)

고향으로 귀촌했지만, 와서 보니 나는 동향인이 아닌 외부인이었다. '본인이 잘 나갈 때는 밖으로 나가더니, 이제서야 돌아와서 뭐하자는 것이냐'라는 취급을 받았다. 처음에는 외톨이 취급을 받는다.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동네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이전에 복무하던 학교 병원의 의사들을 연결해주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갔기 때문이다.

김재경((사)커뮤니티와경제 소장)

현재 정부에서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두 사

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성과 공동체성이다. 국가의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므로 자립이 가능할 정도의 수익을 내어 기업을 운영하지만, 공동체성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귀농하신 분들의 경제적 자립에서의 애로사항은 지원 정책이 산발적이라는 것이다. 종합적 정책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현재 문경에서 두레마을, 지역특산물을 상품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문경시 부서 간의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T/F 팀을 만들어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게 한 바 있다.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지역사회의 유용한 모델이 필요하고, 지원해 줄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지역사회의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이 되도록해야 한다. 귀촌인들뿐 아니라 지역의 기존 주민들 중 다양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근의 지역을 함께 찾다보면 유용한 인재는 많다. 숨어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국책사업을 지원하는 지역 인재로 만들어 지역발전 모델로 삼아야 한다. 사업비가 눈 먼 돈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 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상주의 꾸러미사업 등과 같은 형태가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귀농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귀농한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며 보육이나 방과 후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된다. 프로그램 개발, 교육 기회의 확대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을 통해, 외부 사람의 귀농을 유인하기보다 농촌에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귀농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동체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평가 기준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동체성도 함께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생각한다. 이 점을 고려해야만 현장 공무원들이 움직일 때 큰 효과를 거둘 수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윤승철(하동군 농촌사회과 계장)

해당 지역 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귀농은 실패하기 쉽다. 또한 준비를 너

무 많이 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 역시 실패하고 떠나기 쉽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지역의 문화를 파악하는 것이고, 스스로가 가장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지난 과거는 다 버리고 현재 상 황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귀농 담당자들의 보직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다. 최소 3년은 지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귀농·귀촌 담당자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만큼 담당자들에게 인사고과를 반영하는 등의 혜택도 고려할만 하다. 또한 농업인들에 대한 융자사업이 과도하게 많은 것도 문제다. 특히 농기계 구입을 위한 대출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귀농인 스스로도 들어온 지 2년이 지나면 귀농인이 아닌 농업인으로 생각해야 한다. 5~10년이 되도 귀농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스스로 농민이라 생각하고 농민 대상의 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석태문(지역발전위원회 팀장)

현재 정부에 귀촌 정책은 없다. 귀농·귀촌 정책이란 이름으로 귀농을 지원하고 있지만, 귀농에 가려져 귀촌에 대한 지원은 없다. 사실상 지역공동체는 귀촌자가 농촌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귀촌자와 지역공동체가 잘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귀농은 농업인을 만드는 정책이다. 귀촌을 정책과 연결시키면 농촌에서의 사람 만들기이다. 이러한 차이를 보면 이 둘은 분리되는 것이 맞다.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패턴을 지역에서 만들어야 한다. 귀촌과 지역공동체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농촌 사회에서는 모두가 농사를 짓는다는 하나의 직업으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귀촌해 있으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귀촌이 활발한 상황에서 농촌공동체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는 농촌이 된다. 이것이 농촌공동체, 지역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귀촌과 지역공

동체를 중시하고 연결해서 보려는 방향이다. 농촌에서의 희소 자원은 물건보다 사람이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인적 자원에 대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귀촌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정부 역할이 되어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농업을 전제로 한 귀농에는 포섭적이지만 귀촌자에 대해서 는 도외시하고 있다. 귀촌자들의 재능을 잘 이용하면 농촌 사회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정책의 파트너로 삼을 만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귀 농자에 대해 하는 것처럼 귀촌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김병준(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사무관)

귀촌한 사람들은 본인의 재능이 지역에서 필요할지 알기 어려우므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재능교육을 하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마을에서는 공동체 확보를 위해 폐교 공가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

이종복(봉화군)

봉화에서는 매달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봉화군, 농촌생활, 귀농의 시작법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분들이 귀농을 한다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반대로 지원책만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은 문제다. 현재 양쪽이 반반인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서 의식을 가진 귀농·귀촌인들이 많아지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채상헌(천안연암대학 교수)

지자체의 사례 중 색다른 행정적 지원이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김성광(청도군 귀농인연합회 회원)

청도에는 현재 나이가 많아 혼자서 농사를 짓기 어려우신 분들이 가진 놀고

있는 농토를 조사하여, 그 분들을 3~5명씩 모아 하나의 노동력으로 구현되도록 하고 있다. 귀농이나 귀촌을 하나의 맥으로만 포괄적으로 보지 말고 각 지역의 다양화를 추구하며 지역의 특성화와 연계성을 깊이 바라보아야 한다.

강병직(영주시)

귀촌을 추구해야 성공한다고 본다. 귀촌해서 들어 온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기여도도 있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귀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도시에서의 삶을 피하여 농촌에 오는 경우가 많다. 귀농·귀촌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지원 정책이 알려지면서 귀농자들은 들어오면 무엇이든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으로 인해기대치만 너무 높아서 실망하고 공무원만 고생한다. 귀농·귀촌을 인위적으로 유입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실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보듬어 개개인에게 어울리는 역할을 부여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일환으로 농지은행을 정상적으로 해서 제대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면좋을 것이다.

채상헌(천안연암대학 교수)

귀촌인들의 역할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가?

하순기(거창군)

거창에서는 귀농과 귀촌을 분류하지 않는다. 분리해서 지원할 이유가 없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귀농인도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귀농인은 도시에서 소비자 역할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 포전 거래를 주로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을 경영이라는 입장에서 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 몇 년을 흘러가다 보면 주변 농민들도 그에 영향을 받게 된다. 농촌 사회에 활

력을 불어넣어 주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소기홍(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특히 중앙부처에서 준비하면서 추상적으로 듣던 귀농·귀촌에 대하여 생생하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갑자기 귀촌이 사회의 큰 트렌드가 되어 만 가구가 넘는 새 시대를 열었다. 이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당사자의 자주성·자립성을 기반으로 하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다.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겠지만 농식품부가 주관이 되어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입장에 대해 명확한 정리는 못했지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지역위는 귀촌·귀농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각 중앙부처와 상의를 하여 더 많은 예산을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부처 내에서 찬반이 갈리는 경우도 많다. 낭비적 소지로 갈 수 있고, 다른 중요한 일이 더 많다는 반론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며 귀농이든 귀촌이든 사람이 이사를 해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은 사람이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케이스마다 다르고 어렵다고 느낀다. 귀촌이 나은가 귀농이 나은가에 대한 의견도 다 갈리는데 이것을 모두 종합해서 일관성 있게 통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모델도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더 많이 듣고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 정부의돈이 제대로 잘 쓰이면서 실제로 귀농·귀촌자들이 더 많이 성공해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내어야겠다.

☑ 분과별 토론

□ 귀농·귀촌 분과

채상헌(천안연암대학 교수·퍼실리테이터)

귀농·귀촌 희망자는 행정기관에 정책적 지원 관련 문의를 많이 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집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금전적으로 얼마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행정기관에 의존적인 모습으로 많이 나타난다.

귀농대란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다. 농촌은 현재 고 령화·공동화가 심화되어 있어, 농어촌 입장에서는 싫어도 귀농·귀촌인을 받아들 여야한다. 고정 노동력, 토지, 자본은 농촌 경쟁력의 요소인데 현재 이 세 가지 모두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촌을 살리는 데는 농촌 공간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귀촌인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한다. 귀농인들은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귀촌인들이 지역 사업을 활성화하는 피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들의 활동을위하여 개별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농민들과 생활패턴이 달라서 좋지않은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남편을 따라 귀농한 간호사 출신의귀농인이 따돌림 당하다가 마을의 이장이 쓰러졌는데 응급처치를 하고 일하던병원에 데리고 간 후에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그 사람들의 재능을 보여주고 공동체 속에서의 역할을 찾아줘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가야 하는 방향이다.

강병직(영주시)

귀농·귀촌은 포괄적이고 전반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복합행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상담실도 만들지만 귀농·귀촌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도 행정 주축보다는 사회단체나 귀농·귀촌을 전문적으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사회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사회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자체를 귀농·귀촌자들 중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도 좋고, 각 지자체별로 조직을 하나씩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운용되면 좋을 것 같다.

채상헌(천안연암대학 교수·퍼실리테이터)

지역에 귀농·귀촌 담당자가 중요한데, 귀농·귀촌만 담당하지 않는다. 기술센터나 농정과의 분들은 지역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퇴직한 후 그들에게 임금을 주어 이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 기존 공무원들과 유기적 협조가 잘 이루어지며효과적인 인력 충원이 될 것이다

윤승철(하동군)

하동은 처음으로 귀농 멘토 54명을 선정하였다. 귀농 교육을 할 때는 건설, 건축, 산림과 등 다양한 직군의 직원들이 동원된다. 작년부터 귀농 담당자는 귀농 귀촌 업무만을 담당하는데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부담스러워 한다.

서동주(상주시)

상주시에는 귀농·귀촌만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생겼다. 지도사, 토목, 행정, 농업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명이 모였다. 발령 받아서 두 달째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1명이 하던 업무를 왜 10명이서 할까 했는데, 귀농·귀촌 업무에 대한 포인트가 중앙과 지자체 간에 차이가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귀향 인원이 늘어 나는 것에 대한 방법의 일원이고, 지자체에서는 인구 증가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10명이나 모인 인원의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예산이 없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국에 대동소이하다. 어떤 곳을 봐도 똑같다. 이런 예산 문제를 단순히 지방비로 하려니 상당한 부담이다. 개별 지자체의 귀농·귀촌 수요를 고려하여 중앙부처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귀농인이 와서 농민들을 위해

무엇을 한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도시에서 잘 살다 온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고, 기존 농민들을 우대 안하는 것은 모순되는 역차별적 상황이다.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상주의 경우 빈집 및 휴경지 조사를 처음 실시했을 때는 읍·면·동 직원을 보내서 조사해도 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만 나오는데, 사람을 더 고용해서 읍·면·동에 15일 분의 인건비를 주고 조사를 했더니 그 양이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책들을 지자체 독단적으로 하려니, 방안은 많지만 예산이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이었으면 지자체 단독으로는 어려운 것이다.

강수연(창원시)

창원은 마·창진이 통합되어 110만 정도의 인구가 되었다. 귀농·귀촌에 대하여 시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창원 관내에 귀촌인은 꽤 많다. 근교에 다 도시가 있어 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출퇴근하는 것이다. 창원은 도농복합시이다 보니 창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창원 내에서 귀촌하는 경우가 많다.

귀농 정책 자금을 받으려면 100시간의 교육 수료가 필요한데 수료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고 교육이 없다는 반발이 있어서, 야간에 교육을 개설하니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창원에서 농촌진흥청 쪽의 예산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멘토링도 해왔다. 귀농인 두 사람을 선정해서 멘토링도 했다. 농촌에 연고가 없는 사람은 멘토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채상헌(천안연암대학 교수·퍼실리테이터)

귀농 전에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귀농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농사 기술을 못 배워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없다. 차라리 보일러 고치는 기술을 배워서 가는 것이 낫다. 농촌 사회에는 리셋(reset)이 없다. 한번 잘못하면 끝이다. 교육을 받지 않고 내려간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도시와는 다른 농촌의 특성에

대하여 주의 사항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김희준(영천시)

지자체에서 교육 예산 따기가 어렵다. 교육 외에도 창업지원 교육도 같이 하는데, 지원사업도 예산 받는 게 중요하지만 교육 사업에도 예산을 잘 배치 해주셔야 할 것 같다. 교육을 통한 기초가 되어야 지역주민들과 동화가 잘된다. 인력확보도 매우 필요하다. 다른 일을 하면서 귀농 업무를 담당하려니 너무 힘들다.

강병직(영주시)

귀농을 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농기계 마련이다. 농기계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귀농인을 위한 부분의 예산을 세워 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잉여 농산물이 종종 생긴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 귀농인 공동 판매장을 열고 운영 지원을 해주면 귀농인들이 팔고 남긴 잉여 농산물을 상품으로 처리하기 좋을 것 같다. 농업의 특성상 인력이 항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턴이나 현장실습은 필요할 때만 쓰고 일이 적을 때는 없어도 무관한, 이런 문제가 생긴다. 멘토링에 대한 관심도 많다고 하는데, 지역의유지든 선도농가든 멘토링을 일대일로 맺으면 정착할 때까지 함께 고민하고 보살펴주고 조언을 해주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이루어지는 인턴사업이나 현장실습 사업은 멘토 제도로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채상헌(천안연암대학 교수·퍼실리테이터)

마을 사람들에게 재능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하고 재능을 알게 하여 그 사람이 역할을 맡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역할을 부여하고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해주면 그 들이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이재영(지역발전위원회 연계협력국장)

이러한 토론 프로그램을 기안하게 된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하드웨어 시대에는 정부가 알아서 했는데 지금의 소프트웨어 시대에는 지역에서 특성에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앙과 지방의 지역을 보는 시각 차이를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이분적인 것은 아니다. 귀농인은 지역에서 보았을 때 인적 자원의 유입이다. 이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지역에서 활용하기 나름이다. 그들을 농업적 측면에서만 보고 귀농에 한정시키지 말고, 귀촌 쪽으로도 넓게 보고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르기 위해 오늘 시간을 마련했다. 귀촌자들은 멍석을 깔아주면 자신의 능력을 더 잘 드러낼 것이다. 그 방법이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들이 공동체의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자리를 마련하였다. 모두 기억나지는 않겠지만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들어오는 자산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역할이다. 지혜를 모아서 많은 프로그램을 짜 주시면 중앙에서는 적극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다.

□ 지역공동체 분과

한영로(경주시)

경주는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이 타 지역과 다르다. 기존 농업인들도 FTA로 힘든 상황인데, 소규모 귀농인들까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도시에서 직장을 잃고 자립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농촌으로 내려오는 것이 문제이다. 귀촌은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살 방법을 찾아서 오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 크게 필요치 않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귀촌은 지역경제에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귀농은 자립 기반이 부족하고, 그만큼 지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주민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민과 화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결국 귀농을 장려하는 것이 지역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조강기(영주시)

귀촌은 남는 재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나 기존의지역 주민들은 귀농·귀촌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 때문에 부정적인역할도 한다. 충분한 자본이 없으면 절대로 귀농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농사를 가장 잘 짓는 사람은 귀농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경쟁적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성공이쉽다. 그러나 도시에서 실업 후 도피로 내려오는 사람은 실패가 많다.

서종우(휴먼경영연구원 이사·퍼실리테이터)

시골 어른들 사이에서 귀농이든 귀촌이든 '같이 어울리기 싫다'라는 말이 있다. 귀농·귀촌인들은 기존 주민과는 달리 농업 자체에 있어서는 몰라도, 경영마인드는 훨씬 뛰어나 상대적으로 성공하기가 쉽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지역주민들과의 괴리감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은 도시에서 실패하지 않고 경영마인드를 갖고 귀농·귀촌한사람들이다.

소기홍(지역위 단장)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큰 애로사항이라 생각했는데 성주인 박사의 연구 자료를 보면 이웃주민과의 갈등보다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되어 있다.

성주인(KREI)

분석된 자료는 귀농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실제로 귀농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은 자금 조달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귀농교육 등 준비 없이 귀농을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과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참석자(성명·소속 미상)

귀농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며, 그들은 지역에 와서도 주민과의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에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귀촌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농촌으로 내려와 동화되기보다는 주민을 가르치려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서종우(휴먼경영연구원 이사·퍼실리테이터)

귀농·귀촌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기에 앞서 마을 주민들의 불안감에 먼저 주목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방법대로 농업에 종사했지만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귀농인들은 경영마인드로얼마되지 않아 성공한다. 귀농인들처럼 돈을 벌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니 더욱불안하고, 밉게 보이는 듯하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귀농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즉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기존 주민들에게상대적 박탈감이 들도록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귀농인들을 개방적인 자세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조강기(영주시)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존 주민들이 마을 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다. 현재 60~70대 주민들이 40~50대들과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귀농인에 대해 어느 정도 개방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서종우(휴먼경영연구원 이사·퍼실리테이터)

귀농·귀촌을 위해서 마을 노인들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한다. 그들은 어떠한 교육으로도 개방적인 성격으로 바뀌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방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들을 발굴하여 어느 정도 보완을 한다면 집단 간 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집단 간 심리적인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 및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

조강기(영주시)

귀농·귀촌인들이 기존 주민들 마음에 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귀농·귀촌인들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지만, 지역 어른들에게 자신에게 간섭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이를 받아들이면 된다. 자신의 간섭을 참으면 그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였다고 인식하고, 자신들도 귀농·귀촌인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성주인(KREI)

귀촌하는 분들이 공동체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공동체에 왜 적응을 못하는가? 그것은 앞서 말씀하신 프라이버시에 간 섭을 느낄 때, 자신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의 감이 드는 것이다.

김희진(산청군)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마을의 2/3가 동의해야 조성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 노령자가 많기 때문에 과반수가 동의를 하고 진행되더라도 실제로는 소수에 의해 운영되며, 그들은 대부분 귀농·귀촌인이다. 문제는 그러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

출하기가 힘들며, 창출되었을 때도 그 수익이 실제 업무를 담당한 소수, 즉 귀 농·귀촌인에게 대부분 할당되고 있어 주민들과 불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마을 단위 사업이 투입되면서, 그 사업이 잘되든 못되든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이 야기된다. 특히 귀농인들조차도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데, 귀촌자들의 경우 그 갈등의 골이 더 심할 수도 있다.

성주인(KREI)

마을 공동사업을 하는 이유는 개인이 하면 규모가 작으니 수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 주민들은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 및 자료 수집, 운영프로세스, 리더십에 대한 능력이 없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되고, 이는 결국 도시에서 교육을 받은 귀농·귀촌인들이다.

김희진(산청군)

경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고 이익 분배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때문에 경영이 잘 되는 기업들도 와해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익 배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조원희(상주 귀농·귀촌정보센터)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들 사이에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외부에서 살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마을 관련 사업들의 목표를 수익과 일자리 창출 등 정량적인 것들로만 설정되어 있는데, 이와 함께 사업과 수익을 통하여 주민들이 그 사업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등의 정성적인 성과 역시 사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계획은 1~2년이지만 실상 마을의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단기

계획과 함께 중장기계획도 필요하며, 그 계획을 설정함에 있어 마을 주민도 참여하여 사업을 통한 단기적 수익에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주의 경우 사업 담당자들도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수익을 통해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수익이 많을수록 갈등이 생길 확률이 더 높으므로, 일정 목표 이상의 확장을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하여 경험하고 배우고 가는 내용을 주로 하여, 주민들이 도시민들에 대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가르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농촌의 문화와 전통을 지킨다는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부록 3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촌-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세미나 결과 - 충청권(2012. 9. 6 충남 예산) -

☑ 행사 개요

시 간	주요 내용
시 선	, , , ,
1일차	
$13:50 \sim 14:00$	■등록
$14:00 \sim 14:20$	■개회식
	■개회사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환영사 (최승우 충남 예산군수)
	• 인사말 (홍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14:20 \sim 15:15$	■주제 및 사례 발표
	●(주제발표) 귀촌과 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방안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사례발표1) 농촌지역에서의 귀촌인 역할
	(정경환 서천군 귀농인 협의회 사무국장)
	● (사례발표2) 자치와 협동의 지역공동체 만들기
	(주교종 옥천군 배바우 도서관장)
15:15 ~ 15:20	■중간 휴식
15:20 ~ 17:20	■종합 토론 (진행: 김혜천 목원대학교 교수)
	● 지정 토론
	강삼모 부여군 귀농인 협회장
	박정철 팜카밀레허브농원 대표
	이태근 흙살림 대표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전익수 충북대학교 교수
	이해진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정삼철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종구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자유 토론: 포럼 회원 및 참석자 전원
$17:20 \sim 19:00$	■ 분과별 토론
	•퍼실리데이터
	지역공동체 분과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귀촌 분과 (박미리 디마르 대표이사)
2일차	
$09:00 \sim 13:00$	■ 현장 방문

☑ 종합 토론

김혜천(목원대학교 교수)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다. 귀농·귀촌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성주인 박사님, 실제 귀농해서 선진사례를 보여주신 정경환 사무국장님, 마을 도서관 운동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의 사례를 보여주신 주교종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지정토론 후 참여하신 귀농인과 공무원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

이해진(한국청년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저는 농촌 사회학을 전공한 연구자로 귀농·귀촌과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를 학문 영역 중 사회학적 접근으로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티, 공동체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갈등, 신뢰, 협력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연구자로서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진안군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은 이유는 그런 경험들과 사회학적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포괄보조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기 36개 권역 중 30여 개 현장에 방문하고 4곳을 선정해서 연구를 하였다. 그 몇 가지 경험을 소개하겠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 차이가 지역별로 나타나는데, 그 성과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가 첫 번째 의문이었다. 첫 번째로 발견했던 것은 귀농·귀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귀농·귀촌인들이 마을 주민들과 어떻게 결합하고 공동체적 활동과경제적 사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잘된 마을과 그렇지 못한 마을이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귀농·귀촌 리더가 공동사업을 사유화하거나 특정 집단이나소규모 지역에 이익이 집중될 때, 정부 정책사업은 마을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리더로서의 귀농·귀촌인들이 희

생하고 함께하려는 노력을 한 곳에서는 사업 성과나 지속적인 마을공동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정책이 추진될 때 정책사업과 개발사업의 진행에 귀농·귀촌인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국고보조사업들이 귀농·귀촌인에 의해서 관여가 되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사업의 성과가 나눠진다.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농촌 정책뿐 아니라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발전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남았다고 본다.

현 상태는 농촌 아노미(anomie)라고 생각한다. 아노미는 사회학의 개념인데무규범 상태라고 이야기한다. 공동체나 집단의 질서를 유지했던 규범 이후에대체할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농촌 사회를 흔히 전통적 공동체의 전형으로 이야기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그러한 전형이 사라졌다. 더 이상 농촌 사회를 협력과 나눔의 공동체로 볼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대체할 '함께한다'라는 것들을 만들어 낼 규범이나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 아노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태에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귀농·귀촌 정책, 농촌정책 사업, 자발적인 귀농·귀촌인의 조직화가 커뮤니티와 기존 원주민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지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적 이득과 공동체 모두 중요하지만 경험적으로 둘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 경제적 이득이 공동체 자본을 늘리는 것과 역으로 공동체 기반이 경제활동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확인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농촌정책, 농촌개발사업, 귀농·귀촌 정책, 귀농·귀촌인의 자발적인 조직화 모두 농촌 사회 내에서 농촌 사회 발전과 경제발전이 관계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농촌 사회의 민주주의나시민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농촌 아노미라는 상황과 귀농·귀촌인들이 매개체가 되어 변화의 활력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든 갈등이나 대립은 피할 수 없다. 원주민과 귀농인의 갈등뿐만 아닌 귀농인 조직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민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자, 시민단체, 시

민운동의 조직 활동이 필요하고,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삼모(부여군 귀농인 협회장)

귀농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몇 가지 전하겠다. 부여군의 귀농인 회원은 2008 년부터 지금까지 250명에 이른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농촌을 다시 떠나지 않 는 귀농·귀촌자가 되게 하려면 환경 조성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말을 한다. 귀농· 귀촌의 공통된 특징은 정착에 필요한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 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는 금융적 지원이 필요하다. 저금리 융자 지원이 필요 하며, 귀농인 특성상 담보가 부족한 관계로 정부에서 신용보증을 해주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귀농·귀촌 유형을 말씀드리면 전원형, 경제형, 투기형으로 볼 수 있다. 전원형은 노후 대비 귀촌형으로 안정된 퇴직자로 구성되며, 경제형은 도시생활의 부적응과 회의 등으로 귀촌한 사람이다. 문제는 투기형이다. 경제 불황으로 농촌의전, 답, 주택까지 법원 경매로 외지인의 손에 넘어가는 사례를 보았다. 귀촌인은 토착민의 경계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건의를 하자면 농촌 마을 주민이 주로 친족과 집성촌으로 되어있는 관계로, 토착민과 귀촌인의 화합을 위해서 이장 및 면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정철(팜카밀레허브농원 대표)

저의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저만 내려와서 8년 정도 살고 있다. 처음에는 귀 농이나 농촌에 살고 싶어서 내려왔던 것은 아니다. 저는 원래 무역과 허브차를 제조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하고 마케팅을 통 해 시장에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재배 가능한 농산물이 많다고 여 겨 무작정 하게 됐다. 귀농 지역도 연고도 없이 기후 조사를 해보니 가장 적절 한 곳이 태안이어서 이곳에 귀농하였다. 귀농을 하려면 집을 지어야 하고, 농업 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다. 저는 자본을 가지고 농촌에 왔기 때문에 농촌의 사람들과 적응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농촌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다. 하다 보니 농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농촌은 왜 미국, 일본 등과 괴리가 있는가 생각했다. 말씀하셨듯이 농업은 외부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태풍, 과다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 등 외부 요인이 내부 요인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잘사는 농민들도 있고, 외국의 경우도 안정된 기반에서 잘 꾸려나가는 것을 볼수 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 생업의 관점을 갖는데 외국의 경우 비즈니스의 관점을 가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심고 가꾸기는 하나, 이후 어떻게 팔 것인지 마케팅에 관한 개념이 없고, 농식품부 역시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없다. 지원을 해도 일상적인 홈페이지 구축과 전단지를 만드는 등의 단순한 마케팅에 그친다. 본인의 생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래서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케팅 기술을 주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다.

제 사업의 경우 원료를 생산만 하는 것보다는 경관사업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보여주는 경관사업으로도 효용이 있고, 현재는 관광과 펜션 등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다. 흔히 사람이 많이 오면 수익을 낼 것이라 여기나, 방문객이 많을수록 적자를 내는 경우도 있다. 단지 사람 수가 아닌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다. 체력이 만들어지는 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3~6개월이 걸리고, 지역에서의 적응도 필요하다. 적응 기간 등을 따졌을 때, 본 농원에서는 귀농·귀촌자를 위해 고용의 통로가되고, 추후 독립 시 교육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태근(흙살림 대표)

제가 귀농한 지는 30년이 되어간다. 초창기 10년은 먹고살기 어렵고, 그 다음 10년은 근근이 먹고살았고, 그렇게 20년이 넘으니 먹고살 만하다. 귀농의

성공 여부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3년부터 1~2명씩 받아서 1년 농사를 지어보게 했다.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진다. 우리 지역에 귀농인이 많은데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도움도 받는다. 작년에는 귀농인의 집을 지어서 현재 2가구가 살고 있다.

저의 경우 1988년도에 정부에서 후계자 자금 800만 원을 받았다.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했다. 1999년도에는 선도 개척농 자금 받았다. 전국에서 30명을 선정하여 연수와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유리온실과 땅 구매를 두고 고민하다 땅을 선택하였다. 초기에는 농민운동과 농사, 소 키우기 등을 했다. 농사는 농민들의 노력에 비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농민을 지원하는 일을 해보자 해서 '흙살림'을 만들었다. 당시는 유기농 개념이 없던 때였다.

귀농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내 개인이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를 핵심으로 보아야 한다. 대부분 사회적 가치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사회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농사로 성공한 케이스를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을기업, 사회적 일자리 등이 있는데, 실제 시골에서 부업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안 된다. 연 500만 원 소득이 안되는 사람이 농민의 50%나 된다. 흙살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그 일자리가 없으면 도시에서 식당일을 하거나 할 것이다. 흙살림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노동부에서 받으면서 사회적 일자리가 농촌에 상당히 유용하다는 생각을한다. 100만 원만 지원이 되면,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시골에 정착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많지 않더라도 소득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으면, 농사는 병행하여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많이 해주면, 귀농하는 사람들의 소득 유지가 보장되며, 정착하는 틀이 되지않을까 싶다.

이기원(한림대학교 교수)

각 지역마다 지역적 특성, 기후 환경,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을이 10년 이상 지속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을 얘기할 때 제가 느낀 것은, 원주민은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역으로 지역의 현상을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매몰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용대리이다. 성주인 박사님께서는 용대 2리의 사례를 공동체가잘 커 있는 사례로 보아주셨다. 1960~1970년대의 용대 1리는 벼농사가 잘되고, 2리는 중간으로 쌀은 안 되지만 콩 농사가 잘되며, 3리는 이도저도 안 되는 사람 살기 어려운 마을로 냉해가 심했다. 그러한 환경이 지역민에게 고정관념으로 잡혀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명태를 말리는 데 최고라는 것을 알고용대 3리에 경제적 공동체가 설립됐다. 이후 2리는 그도 저도 잘 안되지만 명태덕장을 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고, 가장 잘 살던 용대 1리는 벼농사의 수익이 떨어져 더 이상 활로를 찾지 못하였다.

강원도에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이 있었다. 용대 1리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신뢰, 협력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화합이 잘 안되었다. 그러던 중 도로 확장 문제가 발생했다.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이었다. 용대 1리에는 도로가 생명줄이었다. 미시령이나 설악산을 넘어가는 차들이 길이 막히면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숙박도 했다. 마을의 경제활동이 벼농사에 의지하지 않고 상업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4차선으로 확장할 때 노선에 대해 갈등이 생겼다. 도로의 왼쪽 주민은 오른쪽 주민에게 양보를 바라고 오른쪽 주민 또한 왼쪽 주민에게 양보를 바라며 갈등이 생겼다. 그래서 이장이 생각한 것은 도로를 우회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도로가 우회되니 마을을 찾는사람이 없어졌다. 그로 인해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마을의 신뢰와 협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무너졌다. 사회적 자본이 없다보니 마을이 유지될 것인가가 우려되는 정도가 됐다.

용대 3리는 황태가 기반이 되어 경제 사업이 잘 운영되는 공동체가 있다. 약 65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한다.

용대 2리는 그 중간이었는데 마을에 변화가 생긴 것은 전두환 부부가 백담사

를 방문했고, 그 길을 따라 도로가 생기면서부터였다. 그리고 백담사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생겼다. 이장이 마을 사업으로서 가능성을 보고 마을 사업으로 내려주기를 원했다. 백담사 측에서는 2대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마을기업의 원형이 갖춰졌다. 1996년부터 매년 1대씩 늘려 2010년에 9대, 금년에 1대가 늘어 10대가 됐다. 기사 11명, 사무직 5명으로 마을기업의 수입이 16억 원 정도가 된다. 경제 규모는 3리와 비교가 안되지만, 용대 2리만의 독특한 문화가 생겼다. 백담사의 연간 방문 인구가 80만 명 가량 되다보니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

아까 소개된 용대 2리의 마을정보회관에서 어린이들 120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방과 후 학습을 한다.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는 구조가 됐다. 그러나 용대 3리는 그러한 문화 없이 아이들을 타지로 유학 보냈다. 현재 황태사업을 누구에게 물려줄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잘 돌아가는 마을공동체의 핵심은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대 2리의 주거래은행은 새마을금고이다. 마을금고의 사업구조 때문에 사업 지원이 어렵다. 반면에 원주 공동체의 경우 신협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학교, 금고, 사회 안전망의 역할이 잘 돌아가야 공동체로서 자리를 잡을 수있다. 공동체의 의미는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말을 빌리자면 '공감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용대 2, 3리를 비교한 이유는 경제적 고리보다는 문화적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 수 있고, 마을에 공감할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함을 알리기 위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민과 귀촌인의 기질이 다르다는 점이다. 공감할 거리를 만들어 끌어가는 게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 우문현답(愚問賢答)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많이 간다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익수(충북대학교 교수)

성주인 박사님의 발표에서 농어촌 인구의 감소 둔화, 한편으로는 과소화 마

을이 늘어나는 상황은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숫자가 희망적이지만 허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도시 인근 지역의 귀촌 인구들이 농업 및 전통적 농촌과는 미스매치(mismatch)라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성 박사님의 말씀처럼 융합되어 있는 a형 마을과 독립된 b마을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농촌에 대한 고민이 농업·농촌·농업인이었는데, b형 마을을 실질적으로 융합해가는 a형 마을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성주인 박사님의 연구를 기대하고 있다.

경영·경제와 같은 부분이 메인이다 보니, 지역개발 사업 속에 화두를 던진 것이 어떻게 하면 마을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지속가능성이다. 이태근 대표님의 말씀처럼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적 기업이 지원을 통해서 돌아가는데, 만약 지원이 끊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농촌 마을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 특정 학생 팀의 발표 중 마을의 소득이 2000 년대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2008~2009년 소득이 급격히 하락했다. 소득이 오른 이유는 마을 이장이 산나물이 갖는 소득 작목으로서의 경제성을 보고 마을에서 키워 소득을 올렸기 때문이다. 2008~2009년 그 이장이 암으로 쓰러짐에 따라 마을 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이렇듯 농촌 지역에서는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흥망성쇠(興亡盛衰)가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역량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귀촌인에 대한 행정 수요가 성주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 기존 주민의 4배만큼 발생한다. 서천군 귀농인협의회와 같이 시스템을 사회적 기업이나 일자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비슷하게 마을 단위의 지역협의회가 활성화된 지역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역협의회가 어떻게 관리되며 활용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삼철(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되었던 정책 운영의 메커니즘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 진행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들은 유사한 형태로 중복 투자되면서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칸막이 행정을 걷어내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안착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 수행, 점검해 나가는 공무원 스스로의 노력에 있어서 정책의 진화가 필요하다. 정책의 진화는 제도 개선, 운영 방식의 혁신이 함께 고민이 되어서 예산의 포괄적 지원,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귀촌 수요자들과 받아들이려는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귀촌자는 지역의 정보를 명확히 모르고 있고, 지역은 귀촌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지역 자원의 정보 소스를 좀 더 체계화해야 한다. 1차적으로 지역 자원에 대한 조사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귀촌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차적으로는 귀농·귀촌인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지역에서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을 할 종합지원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은 실행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귀농·귀촌인들이 지역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이 대부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농촌의 경험과 향수이고, 두 번째는 근로 의욕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으로 봤을 때, 전문 직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골드은퇴자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력을 지역의 전문 경영 닥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공동체회사를만들고 있지만,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부가 중요하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 자원구조, 인문학적 영향에 따라 지역별 여건이 다르다. 이러한 여건의 강화를 위해 뿌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의 정책이 획일적이어서는 안된다. 지역

마다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하려면 중앙으로 부터의 부처 간 헤게모니(hegemony) 경쟁에서 탈피해야 한다.

지역공동체 연계라는 부분에서 귀농·귀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부분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는 성향을 극복하고 탈피해야 한다. 주체가 생산, 가공, 유통 모두 다 하기보다 협력적 네트워크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귀촌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농촌이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병원이나 간호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여 지역의 너싱 하우 스(nursing house)와 같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 호주와 같은 경우 이미 활용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자신의 직업 능력을 살린 일자리 창출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는 이익 분배의 구조 때문이 다. 마을 단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 마을 프로듀서 주체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해 볼 때, 수요자 중심의 정책시스템 구축, 지역 주민 친화형 사업 발굴과 창출, 문화적·정서적 사회 인프라와 물리적 인프라가 함께 고려되는 측면 속에서 정책도 창조적 진화가 되어야겠지만, 귀농·귀촌자들과 원주민의 창조적 존(Zone)을 만드는 정책 메커니즘과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김혜천(한국관광농원협회장)

김종구 과장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지정토론자 외에 참여해 주신 분의 의견이나 질문을 듣도록 하겠다.

전익수(충북대학교 교수)

지역에 은퇴자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살기 어려운 사람들도 들어온다. 실제로 농업이나 농촌 지역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가 안 되고 있다. 월별·분기별로 농업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없고, 고용노동부 조사에도 농업 분야는 빠져 있다. 성주인 박사님의 발표 중, 일본의 경우 일자리 시스템을 밖으로 알려서 관심 있는 사람이 농촌에 오게 하고, 참여하고, 보게 하며, 가능성이 있으면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 우리나라 농업의 경우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관측하고 발표하고 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처럼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관측 및 예측이 필요할 것이다.

김종구(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농식품부의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는 '희망자가 농촌에 들어간다면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가 정부의 기본 원칙이다. 예를 들어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창업했지만 대부분 망했다. 농업도 마찬가지로 창업이다.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지역에 도움이 안되는 이는 농촌에서 받으면 안된다. 그러한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귀농·귀촌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교육이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준비 없이는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간 농촌에서 도시를 키워주는 구조였는데, 다시 농촌이 도시민을 도와주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 긍정적으로 되려면 도시 자본이 농촌으로들어가는 효과를 내야 한다. 최고의 정책 목표는 농촌의 현실을 알려주고 성공할 자신이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정책이다.

작년에 1만 503가구가 들어왔다. 인구로는 2만 3,415명이다. 올해는 상반기에, 8,000농가가 상반기에 들어왔다. 대개 하반기에 이사를 많이 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2만 가구 이상이 농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귀촌자들이 농촌에 와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성주인 박사님이 제안해 주셨지만 대한민국의 20만 농가 정도는 제대로 된 규모로, 지역에서 농업을 산업으로 이해하는 농가인데,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의 귀촌자와 경쟁을 해서 밀려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환경이 급속하게 조성되고 있다. 기존 주민이 도시에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밀려버리는 문제도 고민이된다. 베이비붐 세대는 사실 많지 않다. 50대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30~40대

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정신적으로 무장된 사람이 들어온다.

농촌 지역에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농업은 복합적 종합 예술이다. 단기간, 1년에 농업을 배운다는 것은 어렵다. 정부 정책자금이 사실 영농후계자보다 도시민에게 유리하다. 당장 2~3년간은 소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베네핏(benefit)을 주고 있다. 농식품부의 교육에는 대부분 영농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내년부터는 영농교육보다는 농촌 지역의 생활 기술, 도시의 경험을 농촌의 자원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한 교육을 내년도에 대폭 확대할 계획하에 있다.

농촌 지역의 대부분 사업들이 귀농·귀촌인이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 구조이다. 모델 케이스(model case)로 얘기가 되는 거의 모든 마을이 귀농·귀촌인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사업을 하면서 귀농·귀촌인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농촌 지역 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귀농·귀촌인은 굉장히 우수한 자원이다. 기존 주민들은 나이도 많고 학력도 낮다. 정부의 예산이나 제도 자체가 없어 지자체에서 사업을 못하지는 않는다. 지역에서 못 묶는 부분도 있다. 단순히 귀농·귀촌 차원이 아닌 농촌개발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얘기하셨던 농업인력 관측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산업의 경우 기업체 수요조사로 가지만 농업은 기본적으로 창업이어서 수요조사가 어렵다. 현재는 농업이 법인으로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고의 경우 마이스터고화시키고 거점화시키며 졸업하면 병역 특혜를 주고 지역사회에서 취업해자본을 모으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

귀농·귀촌에 대한 접근 멘토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하면 안 된다. 공무원은 효율성 높은 행정을 해야 한다.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을 내년에는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에서 협의체가 사회적 기업 형태로 가고, 그것이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에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예산 부분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플로어 참석자(소속·성명 미상)

농촌 면 지역에서 사회적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하다. 사회적 서비스가 부족함에도 단지 집을 지어주고 집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귀농·귀촌만이 아닌 농촌의 전반적 삶의 질이 담보가 되는가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김종구(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다르다. 중앙정부는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판단을 해주는 역할인 반면, 지자체는 이와 다르다. 지역사회가 공동화되다보니 프라이빗 섹터(privite-sector)에서 돌아가야 할 서비스가 안되는 것이다. 인구를 늘림으로써 초기 비용은 들지만, 프라이빗 섹터(privite-sector)를 퍼블릭(public)에서 해주었는데 다시 프라이빗 섹터(privite-sector)로 돌리는 것이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강력한 유인책을 쓰고 있다. 최고 많이 지원해주는 지자체에서는 2,25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에서 하겠다는데 제재할 방법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모델을 전파해주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홍 철(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대체적으로 귀촌이든 귀농이든 도시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 다른 지역정책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정부가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좋아서 농촌에 와서 살도록 해주고, 지자체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귀농·귀촌이 본격화된 게 2~3년 전부터이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의 노인들의 고령화로 누군가는 농촌에 살아야 한다. 정부로서는 그들의 편의를 도울 수밖에 없다. 귀농·귀촌인 중에서

하수도, 길 등을 해달라는 요구는 이제는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부분은 지자체도 정부도 인지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나 지자체모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다.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 중하나는 서로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도시에서 살다보니 농촌 주민들과의 문화적 갈등이 크다. 귀촌인에게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며, 원주민이 귀촌인을 고깝게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노력이 많았다. 지금은 농촌에 총각이 없어서 이주 여성이 별로 없다. 현재 농촌에 들어오는 사람은 귀농·귀촌인밖에 없다.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농촌의 생활 공간, 거주 공간 또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 조그만 읍면 소재지까지 다 할 필요 없이 핵심 읍소재지나 면 소재지 중 큰 공간에 대해 농식품부가 관심을 가지면 정착이 될수 있을 것이다.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제 2~3년 동안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정보 전달을 꾸준히 해주면 잘 될 것이다.

☑ 분과별 토론

□ 귀촌 분과

박미리(디마르 대표이사·퍼실리테이터)

서울과 농촌의 생활방식이 다르다.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온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아까 원주민에 대한 역차별이 언급되었다. 지자체장은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 기업을 유치하려고 세제혜택을 주거나 땅을 주거나 하는 등의 지원을 준다. 아까의 질문 내용과 같이 그럼 기존의 업체는 무엇이냐는 질문이 오게 된다. 무엇이든 아쉬운 쪽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랑 같은 이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딜(deal)이나 베팅(betting)을 두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여러 단계에서 힘들다고 느낀다.

나진열(서천군 친환경농림과)

25살에 이장직을 하다가 공직 시험을 봤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귀농·귀 촌뿐 아니라 농촌 문제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실제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례 등을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이 되고 바뀌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다. 다른 공산품처럼 농업의 가격은 유동적이다. 적정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부분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박우정(금산군 농업기술센터)

자료집의 104페이지를 보면, '탈도시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할 때, 실제 민원인이 혜택과 복지를 받을 수 있는 행정 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복지 공무원이 담당한다. 이유는 대도시 소비자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이다. 귀농·귀촌 업무 시 주요 사항이 영농이 아닌 주민편의나 사회간접자본이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못살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갔다. 모든 민원을 공업직 담당자가 했다. 귀농인들이와서 성공했다는 사례를 보면 농업, 공업을 가지고 성공한 것이 아니다. 복덕방, 술집, 여관, 철공소 등의 부차적 부분이 소득을 발생하였다. 순수 농업 발생으로 나온 것은 거의 없다. 우리가 내려온 민원인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전에 1970년대 서울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현재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혹 마을에 내려오신 나이 드신분들께 그 당시 얘기를 물으면 이런 얘기를 한다. 그 당시에는 사기당하지 마라, 말을 조심해라 등의 말을 들었는데, 본인이 내려올 때는 그런 얘기를 해줄사람이 없다고 한다. 가족들이 떨구어 보내는 식이라고 한다.

김종구 과장님께서 아까 하셨던 말씀 중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차이에 대한 것이 가슴에 와 닿았다. 그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현장이 모든 것을 떠맡을 수가 없다. 현재 도로, 상수도 등의 관리 감독권이 없는 사람들이 업무를 맡고 있다. 도시민 이주민 지원 정책으로 바꾼다면 실질적 해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미리(디마르 대표이사·퍼실리테이터)

인구가 많은 나라에 대해서 그 국가의 저력은 많은 인구로 인한 높은 생산인 력과 그로 인한 국가 경쟁력에 있다고 본다. 지역 역시 생산 능력이 있는 인구 를 유입하고자 하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귀촌 관리 감독권이 없고 본인이 감당하지 못한 업무를 넘겼는데, 그로 인하여 처리가 안 되는 사례가 있었는가?

나진열(서천군 친환경농림과)

귀농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가야하는데 예산 등의 수반에 차이가 있다. 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의 관심에 따라 차별된 부분을 요구한다.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에서 하루아침에 농업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농업 관련 부분을 한 계통에서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의 배분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의 단일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미리(디마르 대표이사·퍼실리테이터)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이 영농이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교육으로 가고 있다고 정책을 본다면, 귀농·귀촌 담당자의 담당 업무가 당사자를 상대하는 업무보다는 조직을 꾸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귀농 희망인을 상대하는 것과 귀농·귀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쿠션 작용, 완충 장치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귀농·귀촌을 하는 데자금을 지원하는 현황은 어떤가?

전혁동(음성군 농정과)

그 부분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귀농·귀촌인들에게도 문제가 많다. 일선 지자체에 가면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담의 첫 마디는 우리가 가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이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와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안내자의 역할을 하지만, 그들은 받을 것만을 생각한다. 지자체별로 지원도 다르고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진다. 음성은 지리적 여건이 좋은편이나 상담을 하다보면 막막하다. 지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귀촌인이그러한 기대를 하고 내려오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귀농·귀촌을 철새 성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지자체에서 주는 걸 바라고 오는 사람도 많다. 상담을 받은 사람이 귀농하는 비율이 1%도 안 된다.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반영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귀농·귀촌 단체가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 조직을 육성해서 귀농촌의 상담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박미리(디마르 대표이사·퍼실리테이터)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놀이단'이라는, 깡통 등으로 악기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 현재는 지역에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사로 키운다. 강사직을 주는 조직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료집에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금산군 숲속마을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임종근(금산군 귀농·귀촌 희망센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다. 저는 귀촌 인이다. 우선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업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불만과 시각을 들어보고 싶다.

이철호(영동군 농정과)

귀농·귀촌 업무를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원화되어서 하고 있다. 귀농· 귀촌인에 대한 느낌은 앞서 말씀하신 분의 생각과 같다. 귀농인이 성공하려면 본인의 의지를 가져야지, 지원을 바라는 마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상담전 화를 건 사람의 70%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본인이 정착할 마음이 있고, 농촌에 도움이 되고, 잘 살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제 업무 외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 30% 정도는 그러한 사람이다. 현재 지원 및 보조는 사실 거의 없고, 융자가 주를 이룬다. 정부가 보조에서 육자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담보가 필요하다. 이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 부가 과감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로 귀농·귀촌 희망자와 매일 갈등이 생긴다. 이러한 예가 없도록 이왕 도와주는 것 과감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가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준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문제이다.

박미리(디마르 대표이사·퍼실리테이터)

혹시 지역에 상담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가?

나진열(서천군 친환경농림과)

서천군에서는 상담하는 부분도 있고, 홍보 책자를 만들어 그쪽으로 가보시라 고 안내도 하고 있다.

이철호(영동군 농정과)

지자체마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에 오면 돈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 오면 무엇을 준다는 식의 경쟁은 인구 뺏기이다. 그런 폐단이 없어 져야 한다.

임종금(금산군 귀농·귀촌희망센터)

간디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2007년 학교가 옮겨 올 때도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다. 원주민 입장에서는 처음 온 사람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귀농인에게 도움을 주는 공급자 입장이고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입장인데, 귀농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망하기도 한 부분이 있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의이원화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현장 교육은 실질적 기술 교육 등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 작물, 현황에 맞게 지역에서 해야 한다. 귀농은 이민이라고 생각한

다. 시골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마인드, 가치, 철학에 대한 정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교육 후에 귀농·귀촌을 해서 지자체에서 농업기술 등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금산군에 귀농인 연구회 조직이 3기째 운영되고 있다. 그들과 얘기하다 보면 지역민과의 갈등을 많이 들을 수 있다. 우리는 어차피 굴러들어 온 돌이다. 우리가 도시에살던 합리성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포럼 등에 참석해 보면 많은 이들이 공급자 입장으로만 얘기를 한다. 많은 이들이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기여를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얘기들도 많이 한다. 귀농·귀촌인이 욕보이게 되면 다른 귀농·귀촌인도 피해를 보게 된다. 지역에서 교육 시에도 그러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 가능하시면 시골의 정서 등에 대해 다르다는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한다.

귀농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원 사업 부분에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말 받기 쉽지가 않다. 재력이 있는 사람은 담보를 내서 받기 쉬우나 어려운 이들은 정말 받기 어렵다. 그러한 시스템은 관을 통해 융자를 받게 되는데, 잘 안될 경우 공 무원의 귀책 사유가 된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선별작업이 어렵다. 공무원이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것은 어렵다. 공무원이 상담을 받고 일괄 정보 제공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수반된다. 중간에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박미리(디마르 대표이사·퍼실리테이터)

시작이 어떤 형태이든, 귀농·귀촌은 서둘러서 흥행을 시켰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상품을 수용하려는 경쟁이 있었다고 본다. 저는 선순환적 방법으로 어떻게 도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다. 지역에 자원봉사 형태로 가서 보면, 업체에서 컨설팅을 가서 잘된 사례도 보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보았다. 마을마다 자매결연을 맺는 것 같다. 자매결연을 맺은 업체들이 공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업체들이 잠재적인 귀농·귀촌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다

양한 방법의 문을 열어 놓고 좋은 소비자를 생산자가 찾아서 이주시키는 방법 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담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예전의 가장 좋은 담보는 주택이었다. 요즘의 담보로 가장 좋은 것은 신용이라고 생각한다. 마을의 귀농·귀촌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 사람은 재산이 많은 것보다, 지역을 아끼고 성실한 이들을 받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귀농·귀촌인과 토착민이 서로를 인정하고 고마움을느낀다면 지역에 도움이 되듯이, 행정에 계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좋은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길 바란다.

나진열(서천군 친환경농림과)

앞으로의 귀농 정책은 미래의 후계자 양성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람들을 보면 부동산하던 이는 농촌에서도 부동산을 한다. 도둑질하던 사람은 내려와서도 도둑질을 한다. 실질적 미래 후계자 양성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교육에대해서는 농업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육성이 정책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공동체 분과

이기원(한림대학교 교수·퍼실리테이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 일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 동네 협동조합 문화는 두 가지인데, 수익배분구조와 의사결정구조이다. 수익배분구조는 협동조합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풀무학교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가 중심이 되어 잘 돌아가고 있다. 의사결정구조는 마을의 지원을 받기 위해 마을총회절차를 꼭 거쳤다. 의사결정구조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몇몇 교육받은 이들에 의해 이를 자연스럽게 현실화시켰다.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요소는 오래된 마을에서 관찰되는 요소이다. 엘리노어 오스트롬(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자치'가 중요하다. 마을자치 안에는 ①결사체, ②약속 지키기(정관 보유), ③잉여 재분배 잘하기 등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다. 협동조합 문화가 자리 잡히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될 것이다.

노희랑(서천군)

서천군 귀농인 센터에서의 가장 큰 사회적 가치는 귀농인 정착을 도와주는 것인데 이는 돈으로 환산되기 힘든 면이 있다. 예산 신청 시에도 이를 가치로 증명하기가 어려워 예산 신청이 쉽지 않다.

이기원(한림대학교 교수·퍼실리테이터)

제주도 가시리의 경우 귀촌한 사람들이 마을에 활력을 넣어주고 있었다. 그마을에는 마을 토지가 있어서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곳들은 마을 토지가 있는 곳이 흔치 않다. 홍성군 홍동면의 풀무신협과 원주시 밝음신협이 잘 운영되고 있다. 이 조직들이 어떻게 지역금융지역신협으로 마을공동 지원을 해줄 것인가를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인제군용대리에는 영어교육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도 있었다. 재능 있는 인력들이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유영상(괴산군)

유기농엑스포가 2015년에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 꾸러미사업 등이 활기를 띠고 있다. 어느 한 귀촌인이 꾸러미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분은 깨 작목 초기 단계이고 시설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분이 지역민과 융화해서 지속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기원(한림대학교 교수·퍼실리테이터)

자발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지역공동체로서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인제군 용대리의 경우 21명이 2,000만 원씩 출자해서 영농조합법인을 세웠으 며, 잘 운영되고 있다. 밝음신협, 달거리신협의 경우 노숙자들이 1,000원씩 출 자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흥록(보령시)

로컬푸드는 아직 구상 단계로, 계획상으로는 2012년 말에 세워질 예정이다. 6월에 희망마을만들기사업으로 일본 규슈지역에 다녀왔는데, 로컬푸드는 후쿠 오카가 원조라고 한다. 로컬푸드는 검증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원주도 로 컬푸드를 완주보다 일찍 시작했다고 들었다(한살림).

이기원(한림대학교 교수·퍼실리테이터)

꾸러미사업을 진행하는 괴산군에서 조언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로컬푸드는 생협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춘천생협에서 우리밀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우리밀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했는데 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하다. 춘천시니어클럽에서 도시락 사업을 하는데, 콩나물을 키우기도 하고 공급받기도 한다. 5,000~6,000원 정도의 도시락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 학교에서 회의하거나 할 때 이 도시락을 주문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예스24가 아닌 동네 책방에서 책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특히 공무원들은 지역의 것을 이용하고 구매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부탁한다.

흐름을 바꾸는 3의 법칙이 있다. 동조하려는 심리. 3명만 함께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옛말이 있다. 지역의 리더 한 명,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사람 한 명, 저 같은 사람 한 명. 이렇게 동조할 수 있는 동료 셋만 모아주면 사회가 변할 수 있다.

노희랑(서천군)

서천군에 한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두부 1모를 3,000원에 팔고 있다. 학교나 기업 등 대규모로 납품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 경쟁입찰에서 민간기업을 이기기 쉽지 않은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기원(한림대학교 교수·퍼실리테이터)

입찰할 때 조건으로 지역제한을 두면 어떨까 생각한다(제한경쟁입찰).

인제군 내린천 두부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현재는 자리 잡았으나 과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강원도만 시장으로 삼아야 했는데, 서울 시장을 공략하였다. 풀무원, CJ 등 대기업과 경쟁하기 힘들었다. 알음알음해서 수도권에 택배 (착불)로 팔았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셈이었다. 결국 인제 지역에 한해 판매하는 방향으로 돌아왔다. 기회는 많이 있을 것이다. 실패가 있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은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강점이다. 그러므로 영역이 겹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는 관의 역할이기도 하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다. 서산은 해산물 아니면 두부,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부록 4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촌-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세미나 결과 - 경기·강원권 (2012. 10. 18 강원 원주) -

☑ 행사 개요

시 간	주요 내용	
1일차 (18일)		
$13:50 \sim 14:00$	■ 등록	
14:00 ~ 14:20	■개회식	
	개회사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인사말 (홍 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14:20 ~ 15:15	■주제 및 사례 발표	
	●(주제발표) 귀촌과 지역공동체 정책 연계방안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사례발표1)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활동 사례	
	(이규정 여주군 해바라기마을 대표)	
	●(사례발표2) 살맛나는 달래촌 지역공동체 만들기	
	(김주성 양양군 달래촌영농조합 법인 대표)	
15:15 ~ 15:30	■ 중간 휴식	
15:30 ~ 17:00	■ 종합 토론 (진행: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 지정 토론자(가나다순):	
	강종원 강원발전연구원 박사	
	박재홍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사무국장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윤광일 농식품부 서기관	
	최병석 강원도청 사무관	
	피부호 가평한옥마을 촌장	
	황한철 한경대학교 교수	
$17:20 \sim 19:00$	■ 분과별 토론	
	● 퍼실리테이터: 지역공동체 분과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귀촌 분과 박미리 디마르 대표이사	
2일차 (19일)		
09:00 ~ 13:00	■ 현장 방문 (귀촌인의 사업장 또는 공동체)	

☑ 종합 토론

강종원(강원발전연구원 박사)

이런 자리에 참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의견 보다는 귀촌과 지역공동체 정책을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 다. 연구원에서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마무리 단계 에 있다. 제가 연구한 내용은 앞서 발표하신 이규정, 김주성 대표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다. 지역의 마을 주민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정 작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는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러한 부분의 고민도 필요하다. 단순히 귀농·귀촌인에게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성주인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의 역차 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이 재이주하는 것, 떠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사전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에는 공감한다. 마을에서 외지인들은 50년이 되어도 부녀회장을 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마을 주민의 아들과 결혼해 들어온 새댁은 부녀회장을 시킨다. 이와 같은 마을의 정서를 알고 귀농·귀촌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귀농·귀촌에 있어 농업교육은 강조되고 있으나 농촌사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착 과정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귀농·귀촌 교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에 대한 교육에 너무 치우쳐 있다. 마을마다 특성이 다르다. 기술센터에서 배우는 것과 마을에서 배우는 것이 다르다. 이러한 부분의 고려가 되어야 마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양양군의 경우 이장과 주민을 상대로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강원도 농정과 관련된 토론을 하는데 철원에서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귀농·귀촌 대상자 중에서 단순히 도시민만을 생각하지 말고 지역의 2세, 3세를 마을로 이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지역에 들어오면 집이 없어도 되고 땅이 없어도 된다. 물론 들어오는 데 배척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하는 사람에게 경영 이양을 시키려고 해도 권리를 넘기기도 힘든데 가족이라면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부분의 귀농·귀촌 정책 프로그램의 고려가필요하다.

귀농·귀촌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을에는 혜택이 없다. 귀촌인이 들어와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고 마을 입장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다. 지역의 마을공동체와 연계될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많이 유치하고 많이 들어온 지역에, 또는 마을에 새로운 사업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박재홍(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저는 사회복지 쪽의 일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복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자 고민했다. 말씀을 듣다보니 제가 귀촌자라고 생각이 된다. 귀촌한 지 6년이 지났다. 서울에서 살다가 강원도에 내려와서 사회복지 경험을 지역에서 해보자 는 생각이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원칙과 일치한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 강원 복지포럼을 개최했다. 강원도 광역사회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오늘의 관점과 일치한다. 경기도 32개 시·군을 거의 다 다녀봤다. 이번에 강원도 광역전달체계로 개편하면서 18개 시·군을 다녀보았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살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그분들은 수도권 중심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혜택을 받는데 우리는 이러한 규제를 받는다, 예산, 자원, 인프라가 부족하다 등의 말을 한다. 제가 강원도 오기전에 있던 곳은 집 앞에만 나가도 마트, 생활기반, 문화기반 등이 바로 앞에 있었다. 강원도에 내려와서 저희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생활 터전이 농촌이 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 방법은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찾는다. 아이들과 어울리며 그 지역에 들어가며 사는 방법은 그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성주인 박사님께서 사례로 거론한 부분들은 우수 사례로 소개되며 그러한 공동체가 나타나는 경우인데 공 동체가 나타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며 그 지역의 이장, 귀농·귀촌인, 지역 주민이 함께 풀어왔던 부분들을 어떻게 녹여 내는가의 문제이다. 살기 불 편하지 않은 것이 삶의 질이라고 한다면 지역 주민에게도 맞추어 주어야 한다. 강원도에 와서 많이 느낀 것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수행되는 과정 이 생기는데 이것이 과연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에 강원도 북단의 보건진료소를 방문했는데 진료소장님께서 마을 주 민을 위한 건강, 문화,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 이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귀촌하신 분들 중에서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역을 위해 배려하고 지역 주민이 쓸 수 있도록 한다면 불협화음이 생 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원도의 경우 사회통합서비스 체계를 내년부터 구축해서 들어가지만 지역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함께하느냐에 따라 지역공 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병석(강원도청 사무관)

문제점보다는 강원도에서 귀농·귀촌 정책을 펴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다. 강원도에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적 부분은 도청 농정국에서,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귀농·귀촌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담당하며 시·군에서는 현장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현장교육은 농지 및 빈집 정보, 선도농가 실습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귀농·귀촌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2,167가구가 강원도로 전입을 했다. 강원도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수도권 사람이 가장 희망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분들을 강원도로 모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정리하겠다. 귀농·귀촌인들의 가장 큰 질문은 농지, 빈집 등이다. 현재 정부에서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융자밖에

없다.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는 것은, 귀농인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도농업기술원에서는 현장 교육과 전문 교육을 하고 있다. 귀농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선도농가 실습비 중 일부를 지원하며 정부의 귀농·귀촌 페스티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012년에도 11월 2일부터 4일까지학여울역 앞에 있는 세텍(SETEC)에서 강원도만의 귀농·귀촌 엑스포를 개최한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기 때문에 귀촌-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세미나라는 제목과 부합하는 강원도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다. 강원도 정선군 남면에 개미들 마을이 있다. 총 4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자 18가구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 마을에서 농촌관광객을 연 3만 명 유치하고 있다. 작년도는 전체 매출액이 7억 5,000만 원 이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에 호당 1,000만 원씩 배당하였다. 48가구 전체 소득을 보면 농가당 5,000만 원이다. 그중 농업소득이 3,000만 원 정도이며 농업 외 체험마을 등에서의 소득이 2,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다. 마을 운영 대표가 최법순이라는 분인데 귀촌하신 분이다. 마을 주민과 합심하였다. 이분 또한 고향은 그곳이지만 도시에 나갔다가 귀향을 하니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다. 현재 마을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는 마을 정책회의에서 면담을 통해 들어올지를 결정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귀농·귀촌 실패 사례가 농촌 마을에 펜션 같은 집이 있고 담이 있고 마을 주민과 단절되어 있는 경우이다. 지역 주민과 갈등이 생긴다. 그런 분들은 마을의 발전보다는 저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모든 귀농·귀촌자들이 잘 살면 좋겠으나 나름의 과정을 극복하면서 마을 주민으로 동화되어 가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귀농·귀촌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면 안 정적 귀농·귀촌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형은(지역활성화센터 대표)

초기의 귀농·귀촌 정책이 '농촌으로 오세요'였다면 지금의 정책은 '농촌에서

사세요'가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귀농·귀촌한 마을의 여성 분들을 만나보면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예컨대 면소재지까지 20~30분이 걸려서 생필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 커피 한번 마시려면 인근 도시까지 가야 한다. '목욕탕, 찜질방, 한의원이 가까이 있다면 편리할 텐데'라는 얘기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 공공도 해 줄 수 있지만, 공공보다 민간의 서비스가 훨씬 좋다. 지역 주민이 소비자이지만 민간시장이 없으니 직접 생산하는 방식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방식으로 민간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민간시장에서 생활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이고 고민해야 하는데, 여기에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귀농한 사람들을 포함해 농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농식품부가 진행하던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이나 귀농·귀촌 정책만의 과제가 아닌 그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농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 회사와 같은 것들을 유기적으로 묶어 귀촌한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의 중간지원 조직들이 어떻게 거버넌스(governance)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진안의 민간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고, 그것들이 대부분 중간지원 조직으로 새로운 시장들을 만들어 나갔다.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고민이 되어야, 귀촌한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귀농·귀촌을 통해 많은 인력이 들어오는 것은 좋으나 여러 가지 농촌의 경관, 사회적 특성이 훼손되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부호(가평한옥마을 촌장)

지역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서 지역 주민을 깨우치며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많이 알고 대처를 하면 농촌은 절대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쌀 전업농이다. 안 해본 영농이 없

다. 사람들은 저를 농사짓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차별화라고 생각한다. 농사짓는 사람도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옥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황한철(한경대학교 교수)

귀농·귀촌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성주인 박사님의 발표 마지막 부분의 고민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귀촌과 귀농의 분리가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분리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경기도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면, 경기도에 귀농·귀촌한 인구 중에 귀농은 5%이고나머지가 95%가 귀촌이다. 경기도가 수도권이라서 더 심할 것이라 생각은 되나, 85%의 연령층이 20, 30, 40, 50대이다. 85%가 젊은 층이고 95%가 귀촌인이다. 귀농·귀촌에서 귀촌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학에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 혼란스럽다. 귀농자들은 귀농 교육만에 관심을 갖고 귀촌인들은 관심조차 없다. 기본적으로 정책들을 차별화하여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정책을 펼 때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 농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의 농지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빈 농지가 많지 않은 지역이 있다. 그런 곳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농지 공급이 가능할 것인지, 유입하고자 하는 귀촌인의 수요를 파악해서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분을 모신다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광일(농식품부 서기관)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자면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잘 정착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 같다. 이 모습을 쉽게 비유하자면, 에베레스트 와 같은 멋진 빙산의 이면에는 많은 얼음 덩어리와 같은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한 부분이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과 민간이 어느 정도 책임과 균형을 이룰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이 얼마나 균형을 맞추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황한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맞춤정책이 필요한데,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다 할 수 없으며지방정부에서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지자체의 역량뿐 아니라 실제지역을 이끌어가는 주민 주도로 어떻게 마을 공동체를 발전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다.

농식품부는 색깔 있는 마을 육성이라는 정책을 하고 있다. 핵심은 주민 주도와 지자체의 역량 강화로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 내용은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빌려왔다. 국내에서 2006년부터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모여 고민하고 지도자와 상의하는 부분에서 좀 더 발전된 방안이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상당히 강한 시스템이다. 올해 44개 마을에 시범운영을 하였다. 평가는 아직안 됐지만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지자체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거점 활성화 지원 센터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강원대학교와 공주대학교를 시범적으로 했다. 우선은 대학을 거점으로 한 센터가 있는 도지역과 없는 도지역에는 차이가 있었다. 공무원이 지역의 전문가 집단에게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에 차이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주민 주도 마을 공동체 발전 현장 포럼을 최소한 24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 있다. 지자체 역량을 지원하고 공무원을 지원하는 활성화 지원센터는 9개 대학에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의 합의를 잘 이끌어 내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자체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하는 데 상당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 양평 모꼬지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귀농·귀촌인이 상당히 많다. 시범적으로 처음 현장포럼을 했을 때 그날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이 처음으로 모였다고 했다. 이런 식의 모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귀농·귀촌인의 교육이나 예산, 융자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바로 재능 기부의 부분이다. 귀농·귀촌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전에 농어촌을 방문해 엿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귀농·귀촌을 하는 그순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2011년부터 농어촌 재능 기부를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재능 기부는 농어촌의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사전에 마을과연대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을의 입장에서도 좋다. 현재 1만 5,000명이 재능 기부를 신청했고 연계된 것은 600건 정도이다. 상당히 반응이 좋다. 적극 활용을 바란다.

이규정(여주군 해바라기마을 대표)

황한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맞춤형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교육을 가면 질문을 한다. 땅을 사신 분 중 3년 안에 내려가실 분, 5년 안에 내려가실 분을 손들게 한다. 많이 손든 사람이 3, 5년 안의 사람들이다. 현재 추상적인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과 지금 바로 내려갈 사람들의 교육이 분리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땅 값이 최하 70~80만 원이다. 그곳에 귀농을 한다고 하면 맞지가 않다. 귀농보다는 귀촌이 맞다고 본다.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교육을 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주성(양양군 달래촌영농조합 법인 대표)

주민 주도와 주민 주체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다. 마을의 현실을 보니 우리 나라와는 조금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후계 양성을 위해 교육을 시키 며 노력을 하였으나 그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게 현실이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귀농·귀촌은 직계 가족이 돌아오는 것이다. 원주민과 귀농민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오형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 센 터에 샤워실, 찜질방 등 모든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편의시설을 설립 할 계획이 있다. 그러나 수시로 바뀌는 공무원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 제 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분과별 토론

□ 지역공동체 분과

이기원(한림대학교 교수·퍼실리테이터)

진행은 간단한 소개 후 나누는 것으로 하겠다. 담당 업무와 현황, 세미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김진욱(태백시 농정산림과)

저희 시는 도농 통합이 되면서 농업인이 5만 명 중 127세대 927명이 되었다. 축산은 20농가가 하고 있다. 농촌이라기보다는 도시형 농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태백시는 1996년도부터 귀농이 없다. 그래서 지역공동체가 희박하다. 대 농은 규모는 작으나 소득이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귀농·귀촌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지만, 지원이 대부분 융자이다보니 실제로 귀농인에 대한 혜택이 미비하다. 그래서 그러한 문의를 받았을 때 오라고 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시장경제가 없다. 오투리조트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법을 만들 때 부동산을 구입 못하게 법제화했다. 그러한 법제화로 인하여 태백시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기원(한림대학교 교수·퍼실리테이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공동체가 붕괴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공동체를 극복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 주민이 주도가 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이 여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김진욱(태백시 농정산림과)

고랭지의 경우 그전에는 지역 사람을 고용하였으나 지금은 외국인이 한다.

태백시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 사람에게 빼앗기고 있다. 연령대가 고령화 되다보니 장비에도 밀려 도태되기도 한다.

이기원(한림대학교 교수·퍼실리테이터)

최근 사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다. 탄광에서 이와 같은 새로 운 산업을 전이되어 가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많이 붕괴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김진욱(태백시 농정산림과)

광산이 탈바꿈된 지가 10년이 넘었다. 43개 탄광 중 현재는 2개 밖에 없다. 시내에서는 뱀장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졌는데, 다만 인구가 고령화되 다보니 시장경제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기원(한림대학교 교수·퍼실리테이터)

소비와 같은 경우는 강릉과 비교를 많이 해본다. 제가 느꼈던 공동체 문화로 강릉의 계를 들 수 있다. 일인당 평균 10개씩 하고 있다. 여동생 계, 누나 계 등계가 발전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적 자본이다. 독일의 서민 금융체제를 보면 관계 금융이다. 저 집의 누구는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계나 두레의 개념과 일치한다. 공동 유대의 범위가 어디인가? 신협의 경우 공동유대를 만드는데, 직장지역이 공동유대가 된다. 공동유대가 있어야 하고 경제활동에 있어 먹고살아야 한다. 신뢰가 필요하다. 태백을 다니며 느낀 것이, 위의 두 가지가무너져 나갔다. 세 번째는 공정한 분배가 되어야 한다. 개미들 마을의 사례처럼 마을 사업을 했을 때 공정한 분배가 되어야 한다. 정약용은 계는 회(회의)이고계는 약(약속)이고 계는 두루(두루 고르게 혜택이 가는 것)라고 말했다. 경제사회의 효과가 재분배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효과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개의 사례를 들었을 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유대와 경제공동체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민주구조

로 나타난다. 2개 사례의 경우 다소 독선적인 분위기가 있다. 성주인 박사님의 발표에서 홍동면 사례와 같이 마을 총회를 통해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가를 체크해야 한다. 김주성 대표의 경우 특이한 경우이다. 1년 만에 새농어 촌건설 우수마을이 되었다. 그렇게 혼자 뛰는 동안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분해가 된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다음 단계가 수익의 배분이다. 횡성 금계마을의 경우가 투명한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양양의 해담마을 또한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홍동면의 경우 이러한 문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좋은 점은 5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마을의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가 좋게 평가받는 이유가 사전에 마을의 땅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권상경(홍천군 농정축산과)

올해부터 토지 구입비가 총 사업비의 40% 이하여야 한다. 1년차는 3억 원을 주는데 그 중 40%를 주니까 한해 구입할 수 있는 게 1억 2,000만 원이다.

이기원(한림대학교 교수·퍼실리테이터)

경기도의 경우 그런 것이 없으며 땅값이 더 비싸다. 그래서 마을 땅을 만들기 어렵다. 반대의 경우는 제주도이다. 마을의 땅이 100만 평 이상 되는 곳도 있다. 강원도의 경우 마을이 가지고 있는 마을 땅이 없다. 이것을 풀어준 것이 용대 3리 의 사례이다. 그 이후로 지침이 부지를 살 수 있도록 바뀌었다. 큰 의미가 있다.

권상경(홍천군 농정축산과)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가 강하다. 작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읍면 단위의 마을 발전 방향을 수립해서 농산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이다.

이기원(한림대학교 교수·퍼실리테이터)

백담마을을 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홍천의 살둔마을에 가면 살둔정보화마을 바로 밑에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홍천 지역의 담당자들은 모르고 있다. 마을회관이라도 제대로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를 해놓는다면 마을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 홍천의 좋은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것이 에너지구조의 전환인데 그 답이 홍천에 있다고 생각한다.

홍천의 경우도 방문 인원이 1년에 80만 명 정도가 된다. 16억 원의 수입이 잡힌다. 이 정도면 97개 가구의 필요한 수요를 다 채워준다. 큰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립형 경제가 되려면 그러한 경제활동이 돌아가야 한다. 옥수수의 경우 워낙 응용 가능성이 높은 작목이기 때문에 향토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해봤으면 좋겠는데 강원도의 감자와 옥수수를 신청하지 않는다.

권상경(홍천군 농정축산과)

옥수수의 경우 한 첩에 2만 5,000원 이었는데 현재는 5만 원 이상을 받는다. 물량이 부족하다. 오미자의 경우도 물량이 없어서 축제가 없어졌다. 오지 않아도 택배로 다 팔고 있다. 한살림 회원 수가 2,000농가 정도 되는데 홍천이 2백 명이 넘는다.

이기원(한림대학교 교수·퍼실리테이터)

저의 관심 주제는 협동마을이다. 50년 가까이 잘 유지되는 '문당마을'이라는 사례가 있다. 풀무학교에서 출발을 한다. 공교육과 지방자치가 떨어져 있는데 합쳐야 한다. 풀무학교가 그러했듯 홍동중학교의 교장선생님도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졌다. 협동조합 네트워크도 진광중학교를 중심으로 출발한 것이다. 교육에서 출발했다. 몬드라곤 또한 기술학교가 선구자가된 것이다. 태백의 경우 대학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다. 몬드라곤을 보면 네가지가 다보인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금융과 보험인데 협동조합기본법 강화 시강화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유통 부분은 한살림이 사례가 될 수 있다.

김진욱(태백시 농정산림과)

지역공동체와 이기적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지역의 경우철도가 없어졌다. 레일바이크를 활용한 사업이 준비되어 있지만 지역에 저탄장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 저탄장을 없애고 강원랜드에서 500~600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사업계획서도 다 나와 있는데 못하고 있다.

이기원(한림대학교 교수·퍼실리테이터)

못한다고 생각한다. 공유자원 관리에서의 협치 구조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엘리노어 오스트롬(Elinor Ostrom)이라는 분이 있다. 그분이 제시한 것 중에서 약속을 어겼을 때 점진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태백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태백의 걱정이 하드웨어적 사업만이 투입되어서 걱정이 된다. 소프트웨어적 마인드가 없어져 간다. 태백의 어려움은 큰 사업들, 몇 천억 원 짜리 사업들이 들어오다 보니 시의 자주 재원이 없다. 시장, 시의주도층들이 마인드를 바꾸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건은 참 좋다. 태백은 700m 고원이 많다. 정작 평창에는 700m 고원이 별로 없다. 그런 소프트한 여건들을 그곳에서만 살아오니 못 느끼는 것이다.

김진욱(태백시 농정산림과)

충청도의 꺼먹쌀을 만드는 분에게 '강원도에서 배추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해 10억 원을 벌었다고 해도 다음해 3월 달에는 농작업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를 물었다. 그 대답이 평일에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태백에 대한민국의 '신산(태백산)'이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냐는 대답을 들었다. 대한민국에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이들은 일명 '신기'만 쌓인다면 시도 때도 없이 온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를이용하여 그들이 묵을 숙소,이용할 서비스 시설 등을 구비하면 좋겠다 생각하였다.이에 대한 사업을 건의했더니,예산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기원(한림대학교 교수·퍼실리테이터)

바로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적으로만 접근하기에 문제이다. 사고를 소프트하게 전환해 나가야 한다.

마상진(KREI)

지역에서 따로 노는 행정에 대표적인 것이 교육행정이며, 농정의 일반 복지 행정도 다른 행정들과 따로 논다. 예컨대 협동조합도 연계가 되지 않는다. 시· 도 자체에서 농업 관련된 사업들이 연계될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 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진욱(태백시 농정산림과)

지자체 업무와 기술센터 및 진흥청의 업무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연계가 쉽지 않다. 기술센터나 진흥청은 기술 보급에 대한 업무가 많고, 농작물 질병이 생기면 치료해 주는 등의 일이 다수로, 행정 측면에서의 업무가 지자체 업무와 는 많은 차이가 있다.

□ 귀농귀촌 분과

박미리(디마르 대표이사·퍼실리테이터)

여기 모인 공무원 분들은 마을과 귀촌인 간에 맞선을 잘 주선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장에서 어려운 역할을 해주고 있다.

과거에는 이사를 가게 되면 통반장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사 온 집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서 사람이주소를 옮기고 나가는 정보가 현장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와같은 절차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편리하게 이사 오고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사람 사이 정 있게 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 있다.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다.

이귀화(원주시)

예전에는 이사 오는 사람에 대해서 통장에게 기초 유입정보를 주고 확인을 받거나 했었는데, 요즘은 행정계통을 통하여 바로는 아니더라도 한 달 간격으로 이장에게 통보를 해준다. 확인을 해달라고 하지만 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형식적으로 사인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 마을에 누가 왔구나 하고 새 주민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박미리(디마르 대표이사·퍼실리테이터)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사비용을 주는지 등 구체적인 액수를 묻는 경우도 많고 문의가 많다. 전라도는 돈을 주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금전적 지원을 해준 다는 얘기도 있다. 강원도는 웬만하면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이고, 원주의 경우 수 도권 안에 편입이 되고 도로망이 가까워서 혜택이 적다는 얘기가 있다. 강원도는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로 왔다가 가는 경우가 많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가는 경 우도 있어서 경기·강원권은 여러 가지 고민이 섞여 있다.

함영오(연천군)

관련 정책은 인구 유입정책 위주의 귀촌정책을 펴고 있다. 상담하면서 느끼는 점은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연천에서는 1,9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다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빈집과 땅을 제공한다고 광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 그런 경우도 거의 없다.

연천군의 경우 귀농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해당 업무를 인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다시 군수님이 귀촌 위주로 정책을 바꿔서 군청에서 다 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태진(인제군)

2013년 1월 1일부터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늘 오면서 전화 두 통을 받았고 상담을 하였다. 인제군은 수도권과 가까워 문의가 많은데, 거의 농지에 대한 지원 사항을 묻는 경우가 많다. 문의자 나이는 다양하다. 대부분 지원사항이 뭔지를 꼭 물어본다. 하루에 몇 번씩 전화 응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 지원이 이것밖에 없냐는 식의 전화도 많다.

박미리(디마르 대표이사·퍼실리테이터)

강원도 안에서라도 ARS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게 해서 20분 내에 해결될수 있는 것은 한 번 걸러주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제 상담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적으로 소모적인 일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귀농·귀촌 파트가 ARS로 갔다가 상담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다. 업무에 대해 기술적으로 힘든 점은 실제로 없다고 한다. 시·군에서 제공하는 것은 어느 정도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점은 없는데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귀촌인에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지 않으면 마을은 소멸될 운명이기 때문이다. 내 터전을 당신이 지켜주기 때문에 고맙다고 해야 하고, 귀촌인은 경치 좋은 곳에 살 수 있게 이 마을을 유지해줘서고맙다고 해야 한다. 이 둘을 중재하는 것이 여러분이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본다.

윤병주(강릉시)

시나 군의 담당자도 있지만, 읍면 단위에서의 담당자도 있다. 실제로 귀촌 상담인이 왔을 때 시 담당자가 담당하기에는 지역이 너무 넓다. 시·군 내에도 땅값부터 차이가 많이 나고 여러 지역이 제 각각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릉시 공무원은 강릉시 주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실제로 귀촌 상담자는 강릉시 주민이 아니라 타 지역 주민을 상대한다. 귀촌 상담자가 서울 시민이면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한 사람이 나가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1사1촌을 왜 좀 더 확대해주지 않느냐는 의문이 드는데 가고자 하는 사람이나 받고자 하는 사람(마을)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 많다. 귀촌을 할 수 있게끔 소스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도 특색이 많다. 이 분이 진짜로 귀농해서 성공할 수 있게 만들려면 작목 등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최대한 귀농인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있다. 농지의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까지 된다라는 정도의 정보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합적인 맞춤 정 보를 주기는 힘들다.

박미리(디마르 대표이사·퍼실리테이터)

세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지역민이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유입되기 바라는 전라도는 2,500만 원을 주는 것이다. 서울시민이 다산센터에서 귀농·귀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한다면 해주겠지만, 타 지자체에서 해달라고 한다면 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집이 홍천에 땅을 샀는데 맹지였다.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정보를 주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또 지자체에서 정보를 잘못 주면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귀촌인이 굉장히 빠른속도로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귀촌인이 소수여서 괜찮았지만 지금은 마을 안에 귀촌인이 많아져서 기존 마을 주민들이 오히려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

정신용(춘천시)

2008년부터 귀농·귀촌인이 하나 둘씩 관심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힘든 건 전화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것이다. 춘천은 실질적인 지원이 많지 않은데, 지원이 왜 그것밖에 없느냐고 말하면서 다른 지역의 지원 사항과 비교하기도 한다. 방송에서 너무 홍보를 하니까 핑크빛 생각을 하면서 무턱대고 귀농·귀촌을 생각

하는 것이다. 지원 사항을 물어보고 별로 없으면 전화를 딱 끊는다. 그래서 실제로 오실 생각인지, 정보가 궁금해서 전화한 건지부터 먼저 물어본다. 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하면 거기서 50% 이상이 전화를 끊는다. 융자 지원이자가 3%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호응이 높지만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실제로 상담자 중에 90% 이상이 오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다. 상담자들이 문의하는 핵심은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것이다. 농작물 관련 2억 원을 다신청하고 융자조건에 대해 농협에서 상담을 하면 실제로 혜택사항이 50% 깎인다. 실제 상담할 때 채무상황을 얘기 안하고 있다가 농협에서 상담할 때 채무상황이 드러나니까 혜택이 깎인다. 공짜로 받기만을 원하고 본인이 직접 뭔가를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다. 농협에서 먼저 상담받고 오라고 해도 상담 시 처음부터 채무나 담보 등을 얘기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상담을 많이 해도 결국에 지원을 많이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드러나서 다시 처음부터 상담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신석천(철원군)

귀농·귀촌 상담이 인생 상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이 망해서 이왕 죽을 거시골 가서 죽으려 한다. 가게 되면 무슨 지원을 해주는지 묻는 경우도 있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귀농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귀촌 정책 목적은 균형발전, 인구 증가, 수도권 인구 분산 등이므로 농업정책과 부서 위에 인구담당 총괄 파트가 있으니 그런 부서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귀농 부분에 대한 상담만 농업정책과에서 맡았으면 한다.

박미리(디마르 대표이사·퍼실리테이터)

농업정책과는 농업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등 관련 업무가 많은데, 귀농에 '농'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해야 하 는 것보다는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좋은 의견인 것 같다.

이상기(횡성군)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횡성군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농지 전용 서비스가 있는데 호응이 좋다. 귀촌 희망자들이 와서 상담 받고, 문 제가 없다면 농지 전용 등도 도와주는데, 조건은 농지에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 는 것이다. 호응이 굉장히 좋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은 역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베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지원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것은 농정 분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홍보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받고 우리한테 와서 상담을받으면 2억 원 대출이 아무 담보도 없이 그냥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다. 자세히알아보면 모두 사후 대출금이다. 사전 대출인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상담하는 입장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언쟁을 하는 경우도 많다.

박미리(디마르 대표이사·퍼실리테이터)

횡성의 경우 자기관리에 대해서 작지만 강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기 싫으면 오지마, 우리는 올 사람만 오면 된다라는 식이 좋다. 꼭 횡성에 오 겠다는 사람이 횡성에 와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정책 지원금을 탈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주상(양주시)

온 지 2~3주밖에 되지 않아서 배우려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귀촌인 상담하다 보면 연천군 얘기를 많이 꺼내서 비교한다. 농협에 가서 상담받아 보 라고 권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김정기(영월군)

귀농·귀촌을 도피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에서 파산했다고 하거나

산골 깊숙이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

홍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전대출에 대한 상담이 많기도 하고, 영월군 홈페이지에 지원 금액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건 등이 각각 붙어 있어서 실제 500만 원을 모두 지원받기 쉽지 않다.

김지석(강원도)

공무원 된 지 9개월 됐다. 짧은 기간이지만 농식품부 회의도 참석해보고 세미나도 가 봤지만, 귀농·귀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든다. 사람이 와야 된다. 정책 같은 것도 사람 많은 서울에 하나 더 반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이 있어야 한다. 태백, 삼척, 동해를 합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폐교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다. 서울시에서 2만㎡ 정도 임대 가능한 농지 정보에 대한 서울시 협조 공문을 통해서였다. 서울형 농장 등 서울시에서도 엄청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홍보는 하지 않아도 올 사람은 온다. 그러나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본다.

나는 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 담당인데, 귀농·귀촌한 여성분들이 고충을 많이 털어 놓는다. '성 인지'와 귀농·귀촌한 여성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한다.

정지선(삼척시 미로면)

면사무소에 전화가 많이 온다. 시내와 가까운 농촌(시내 10분 거리)인데, 오시면 30만 원 주고, 쓰레기봉투 5장 준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 마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이장이므로 이장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그 마을에 어느 집이 비었고 어떤 농지가 나왔는지 등 많은 상담이 오간다. 시·군에서 면에 넘겨주면 면에서도 이장에게 전화 돌리는 등 나름의 대처 방법이 있다. 이는 책임 전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업무 분담도 된다고 본다.

박미리(디마르 대표이사·퍼실리테이터)

여러분들의 역할은 중간자적인 입장이다. 귀농·귀촌을 먼저 한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센터가 있어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듯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인다. 고급 인력들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로 시달리지 말고 업무 분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한 사람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있고, 올 만한 사람들을 지역에 적절히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시·군보다는 면, 면보다는 이장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군 내에서도 부서 간의 역할 분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정섭, 마상진, 성주인. 2012.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KREI 농정포커스」 제13호.
- 김정섭, 임지은. 2012. "농어촌 지역의 인구·산업·일자리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주성. 2012. "살맛나는 달래촌 지역공동체 만들기."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촌-지역공 동체 정책 연계 세미나 자료집(강원·경기북부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2012. "귀농·귀촌자의 영농 실태와 교육 요구 분석."「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럼 제2차 전문가 세미나 자료집」29-4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문호, 오내원, 임지은. 201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추진방안」. 한국농촌경 제연구워.
- 성주인, 김성아. 2012. "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농업전망 2012」. 한국농촌 경제연구워.
- 성주인, 박대식, 마상진. 20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박문호. 2013.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업전망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박시현, 김용렬, 윤병석, 남기천. 2012.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채종현. 2012.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 「KREI 농정포커스」 제2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완주군청 농촌활력과. 2012. "완주군 농촌활력 주요 사업."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촌-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세미나 자료집(전북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재철. 2012.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사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촌-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세미나 자료집(전북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장윤정. 2012. "행복한 교육을 구워내는 건강한 빵굼터 사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촌-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세미나 자료집(전북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경환. 2012. "서천군 귀농인협의회 활동 사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촌-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세미나 자료집(충청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원희. 2012. "상주시 귀촌인 정착 및 활동 사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촌-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세미나 자료집(경북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교종. 2012. "자치와 협동의 지역공동체 만들기(옥천군 안남면 사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촌-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세미나 자료집(충청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165

귀촌과 지역공동체 육성 정책의 연계 추진방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10.

발 행 2012. 10.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 e-mail:dongyt@chol.com

ISBN: 978-89-6013-446-1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